



제89차 여성정책포럼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 일 시 | 2014. 10. 14(화) 14:00~17:0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B(지하 2층)



주최 |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제89차 여성정책포럼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 일 시 | 2014. 10. 14(화) 14:00~17:0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B(지하 2층)



주최 |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이 발표는 진행중인 연구이므로 인용 및 복제를 금함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89차 여성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합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 인권피해 사례들은 시민들의 온라인 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의 역기능은 중요한 생산과 소통의 장으로서의 온라인의 순기능을 왜곡시키게 됩니다.

특히 여성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스토킹, 명예훼손, 영상유출 등은 여성의 성장을 가로막으며 온라인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 위상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포럼을 통해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주소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온라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셔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014. 10.

여성가족부 장관 김 희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이 명 선

프로그램

PROGRAM

13:30~14:00	등 록	
14:00~14:10	개회식	사 회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장) 인사말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14:10~14:40	발 표	좌 장 윤영철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발표 1.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 김수아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14:40~15:00		발표 2.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개선방안 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문화정책센터장)
15:00~16:20	지정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과장) • 유정석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운영실 팀장) • 강형철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 소장)
16:20~17:00	종합토론	

목 차

CONTENTS

발표 1

-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 1
김수아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발표 2

-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개선방안 35
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문화정책센터장)

지정토론

-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과장) 59
유정석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운영실 팀장) 61
강형철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65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 소장) 67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

김수아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1. 서론

1) 조사 목적 및 의의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들이 자유롭게 온라인 세계에 참여하는 데 있어 현재 존재하는 장애요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특히 여성들이 당하는 명예훼손, 사이버 폭력과 성폭력, 스토킹, 모욕 등 인권침해의 현황과 구조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정책적 대안과 민관 협력을 통한 기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지만, 인터넷 매체의 익명성과 확산성 때문에 표현의 자유 보장이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 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인권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정확한 통계가 구축되지는 않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건수를 통해 대략의 피해 상황을 예측해 볼 수는 있지만¹⁾, 상당수의 시민들이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이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인 인권 피해의 현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온라인 인권피해의 성별 양상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피해가 성별화 되어 일어난다면 이는 공론장으로서의 인터넷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인권피해를 당하는 특정 집단이 공론장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느끼게 되면 이들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배제되면서 공정하고 평등한 여론의 장으로서 인터넷의 역할은 필연적으로 훼손된다. 또한 개개인의 입장에서 심리적인 측면에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성들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SNS같은 즉각적 확산 효과가 높은 매체의 경우 인권침해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여성들이 사이버공간에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본 조사는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인권피해의 현황을 파악하고 인구학적 변수와의 관계를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각 유형별, 그리고 인권피해가 미치는 영향에 있어 성별과 연령이 어떤 상관관계 혹은 인과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국 단위의 설문 조사를 통해 기초 피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인권 피해의 메커니즘과 구체적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온라인 인권 피해를 경험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이를 정리하였다. 이 조사는 향후 온라인 인권 피해의 성별화 현상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3분기 사이버인권침해 상담에서 총 267건 중 명예훼손 70%, 모욕 12.4%, 성폭력 0.7%, 스토킹 0.7%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팀, 2012. 12. 6)

2) 개념 정의

본 조사에서는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피해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1)스토킹, 2)성폭력, 3)명예훼손·모욕, 4)영상 유포와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현황을 알아보았다.

먼저 온라인 스토킹은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계속 연락, 개인의 행적을 추적, 그리고 오프라인인 만남을 계속 요구받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모르는 사람이 나의 블로그나 홈페이지, SNS를 방문해 나의 개인정보나 일상을 엿보거나 감시한 적이 있는지,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사적인 메시지(메일, 댓글, 카톡 등)를 반복해서 보내거나 만나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를 무시했을 때 협박을 받은 적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온라인에서 내 주변 사람에게 접근하여 나에게 대한 정보를 알아내려고 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온라인 성폭력은 성적 욕설이나 신체에 대한 불쾌한 메시지를 받는 경우, 온라인 상으로 원치않는 음란 게시물을 보거나 전송받은 경우, 원치 않은 성적 대화를 요구 받은 경우, 성관계 제안을 받은 경우, 성매매 제안을 받은 경우등을 포함하였다. 성폭력 범주 안에 성희롱과 성매매 제안 경험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성폭력을 가장 포괄적으로 정의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명예훼손·모욕을 ‘온라인에서 개인의 신상 정보가 유포되는 것, 개인에 대한 거짓 정보가 유포되는 것, 온라인에서 개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비난, 욕설이 유포되는 것, 온라인에서 메신저나 메일을 통해 지나친 비난이나 욕설을 듣는 것, 온라인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개인에게 비난이나 공격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영상 유포 피해는 스마트폰 이용 이후 특히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내 몸의 은밀한 부분, 혹은 성적 행위가 찍힌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된 경우, 그리고 허락없이 타인에 의해 사진이나 동영상에 온라인에 유포된 적이 있는 경우로 분류하였다.

2. 조사 대상 및 방법

1) 설문 조사

(1) 조사 대상

조사의 모집단은 만 15세 이상, 50세 미만의 전국 남녀이다. 온라인 피해를 조사하는 목적에 맞게 50세 미만의 인구로 한정하였으며 또한 연령대별 대표성을 위해 미성년인 15세~18세, 그리고 19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로 나누어 500명씩 할당하였다. 또한 여성의 인권 피해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각 연령대에 여성과 남성을 6:4의 비율로 임의 할당하여 조사하였다. 본 조사는 2014

년 5월 8일에서 30일 사이에 온라인 조사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응답자는 전체 2,043명 중 남성이 827명(40.5%), 여성은 1,216명(59.5%)인데, 이를 실제 인구를 대표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부여하여 남성은 1,053명(51.5%), 여성은 990명(48.5%)로 보정하여 사용하였다.

(2) 조사 문항과 측정 도구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인권피해 유형별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인권 피해는 스토킹, 성폭력, 명예훼손·모욕, 영상 유포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각 유형별로 피해경험, 피해가 일어난 공간, 대응방법, 피해 후 심리상태 등에 대해 문항을 개발하였다. 한편 가해 경험에 대해서도 피해와 같은 유형을 원용하여 질문하였다. 다음으로 인권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응답자가 판단하는 온라인 공간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 응답자들의 온라인 윤리 의식 및 자존감, 스트레스, 성역할갈등 등의 심리척도를 조사하였고, 청소년의 경우는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조사 문항을 활용하였다.

응답자의 온라인 이용 패턴을 알기 위해 일주일 평균 온라인 이용시간, 온라인 매체 이용 빈도와 활용도를 측정하였고, 일차적으로 온라인 주 사용자를 분리하기 위하여 조사 서두에 하루 1시간 이상 온라인을 이용하는지 여부를 물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2) 심층 인터뷰

〈표 1〉에 주요 면접 대상자를 정리하였다. 심층면접은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스토킹, 성폭력, 성매매 제안, 동영상/사진 무단 유포, 언어폭력, 명의 도용 등의 온라인 인권피해로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거나 가해 경험이 있는 여성 10명, 남성 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면접 대상자 모집은 온라인 검색을 통해 피해를 겪은 내용을 게시한 작성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및 카페, 대학생 온라인 자치 커뮤니티, 그 외에 남녀 모두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등에 협조 요청하여 진행되었다. 심층면접은 2014년 3월부터 7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표 1〉 면접자 특성

면접자	연령	피해 유형	주요 피해 발생 장소
여성 1	20세	영상유포 / 명예훼손	SNS: 페이스북(Facebook)
여성 2	30세	성폭력 / 모욕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여성 3	29세	성폭력	채팅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너랑나랑
여성 4	28세	성폭력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여성 5	27세	스토킹 / 성폭력	온라인 카페: 버룩시장 / SNS: 싸이월드
여성 6	17세	영상유포	웹하드: N드라이브
여성 7	17세	영상유포	웹하드: N드라이브
여성 8	43세	성폭력, 명예훼손	온라인 게임 / 디시인사이드 등 커뮤니티
여성 9	25세	스토킹	커뮤니티: 카페
여성 10	28세	성폭력 / 모욕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남성1	27세	스토킹 / 성폭력	SNS: 페이스북(Facebook), 채팅 어플리케이션
남성2	29세	성폭력 / 영상유포	채팅 어플리케이션
남성3	29세	성폭력	채팅 어플리케이션
남성4	31세	스토킹	SNS: 페이스북(Facebook)

3. 설문 조사 결과

1) 응답자의 온라인 이용 특성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피해 현황을 살펴보기 때문에 먼저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스마트폰, 태블릿PC, 컴퓨터 등을 통해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 SNS, 메신저, 게임 등)을 평소에 얼마나 이용하는 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 전체의 평균 이용시간은 25.02시간, 중간 값은 20시간이었고 이중 남성은 24.99시간, 여성은 25.05시간으로 나타났다. 중간값 20시간을 기준으로 이용자를 분류하였을 때 20시간 이상 이용자인 중이용자가 전체 55.4%, 경이용자는 44.6%였고, 연령대별로 보면 10대가 가장 활발히 온라인을 이용하고 있으며, 20대는 소극적인 온라인 이용을 하고 있었다. 인터넷 이용시간에 있어 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조사 결과, ‘정보 검색’, ‘메신저’ 이용 빈도가 매우 높았으며, 다음으로 ‘SNS활동’, ‘게임’, ‘커뮤니티 활동’, ‘블로그/미니홈피’ 순으로 스마트 폰으로 활용하기 쉬운 포털 사이트 검색, 뉴스 검색, 채팅 등은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를 보면, ‘게임’의 경우에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이용하는 빈도가 현저히 높았으며, ‘정보검색’과 ‘메신저’의 경우에는 남녀 모두 이용 빈도가 높아 남녀 차이가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블로그/미니홈피, SNS, 커뮤니티 활동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온라인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주로 이용하는 활동에 대해서 알아 본 결과, 가장 자주 이용하는 활동은 ‘게시물 읽기’와 다음으로 ‘문자 또는 대화하기’로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이에 이어 ‘댓글 달기’, ‘타인 자료 공유하기’, ‘나의 일상 게시물 올리기’, ‘관계 맺기’, ‘내가 만든 창작물 올리기’순으로 나타났다. 소극적인 활동은 이용자의 대부분이 자주 이용하고 있었으며,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이용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내가 만든 창작물 올리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부분에서 여성보다 소극적이었던 남성이 가장 적극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관계 맺기’에 여성보다 활발하다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온라인 인권피해 경험

(1) 스토킹

① 스토킹 피해 경험과 주요 경험 장소

최근 1년 동안의 스토킹 피해 경험 결과를 조사한 결과, ‘모르는 사람이 나의 블로그나 홈페이지, SNS를 방문해 나의 개인정보나 일상을 엿보거나 감시한 적’이 있는 경우는 남성 중 679명(59.7%), 여성 중 640명(64.6%), 전체 총 1,270명(62.2%)이었다. 스토킹 피해 경험(스토킹 피해 문항 1번)이 가장 많은 집단은 30대 여성(210명, 70.7%)이었다.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사적인 메시지(메일, 댓글, 카톡 등)를 반복해서 보내거나 만나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전체 남성은 394명(37.4%), 전체 여성은 384명(38.8%)로 총 777명(38.0%)의 응답자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 피해는 40대 남성(152명, 43.9%)에게 가장 많이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를 무시했을 때 협박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남성이 182명(17.3%), 여성이 132명(13.3%)로 남성이 여성보다 피해 경험이 많았으며, 총 314명(15.4%)으로 다른 스토킹 피해 경험에 비해서는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모르는 사람이 온라인에서 내 주변 사람에게 접근하여 나에게 대한 정보를 알아내려고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남성이 343명(32.6%), 여성이 258명(26.1%)로 총 600명(29.4%)의 응답자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 유형의 피해 경험이 많은 집단은 30대 남성(112명, 36.2%)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스토킹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확률에 있어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모르는 사람이 일상을 감시하는 경우는 여성이 피해를 당할 확률이 남성보다 더 높으며 온라인 상으로 모르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를 무시했을 경우 협박을 받거나, 주변에 접근하여 정보를 추구하는 경우에는 남성의 피해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스토킹 피해 발생 장소는 'SNS'로 총 493명(34.5%)이 스톱킹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다음으로 '메신저'(424명, 29.7%), '포털/커뮤니티'(204명, 14.3%), '개인홈페이지/블로그'(133명, 9.3%), '메일'(92명, 6.4%), '게임'(73명, 5.1%), '기타'(9명, 0.6%)순이었다. 스마트 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SNS', '메신저' 같이 스마트폰으로 쉽게 활용가능 한 플랫폼에서 스톱킹 피해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젊은 10대와 20대는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서 스톱킹을 피해를 많이 받고 있으며, 연령이 높은 30대와 40대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네이버, 기타 채팅어플)에서 피해를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스톱킹 피해 시 대응과 처벌 여부

피해자들이 스톱킹 피해를 겪고 난후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를 확인하였는데, 대체로 '아무런 대응하지 않음'이 621명(37.0%)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대처 방법을 모르거나 스톱킹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비스 이용 안함'은 남성(160명, 17.3%)보다 여성(218명, 24.9%)의 응답자 비율이 많아 여성의 소극적인 대응의 양상이 두드러진다.

응답자들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가 총 226명(36.4%)로 가장 많았다. 여성의 절반인 47.9%(144명)가 대응방법을 몰랐다고 답한 반면 남성의 41.0%(130명)가 신고를 해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대응하지 않았다고 답하고 있어 남녀 사이에 피해대응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여성의 피해대응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등, 탈퇴하는 등 자신의 온라인 활동을 줄이는 면이 남성보다 두드러진다.

스토킹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 신고센터에 신고한 비율은 15.7%,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1.0%인데 서비스신고센터 신고 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는 21.1%(46명), 경찰에 신고한 경우가 1.0%(16명)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 88.2%(15명)는 처벌을 받지 않고 단, 11.8%(2명)만이 처벌을 받았다. 스톱킹 피해를 겪은 후,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왜 처벌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 관련법이 없어서가 주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③ 스톱킹 피해의 이해와 스톱킹 대응의 중요성

온라인 스톱킹과 같은 인권피해를 겪었을 경우, 물질적 손실보다는 정신적 피해가 더 크다. 스톱킹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성별로 보면 특히, '온라인 활동에 대한 흥미'의욕이 떨어졌다'와 '우울했다'는 감정적 피해에서 남녀 성별간의 평균차이가 나타났는데, '온라인 활동에 대한 흥미와 의욕이 떨어졌다'(남성 평균 2.07, 여성 평균 2.22, $t=-3.463$ $p<.05$)와 '우울했다'(남성 평균 1.83, 여성 평

균 1.99) 모두 여성이 유의미($t=-4.063$ $p<.05$)하게 정신적 피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와 30대 여성에게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결론적으로, 스토킹에 있어 한번이라도 피해를 입을 확률은 여성은 70.17%, 남성은 67.12%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응답자의 많은 사람들이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는 것이다. 즉, 우리 사회에서 스토킹이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법적 정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글, 기호, 음향, 사진,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많은 사례들이 이에 해당될 수 있지만 실제 법집행에 있어서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신체적인 접근이 아닌 한 범죄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전반적인 피해 상황에 있어서 여성의 정신적 피해와 지속적으로 이후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스토킹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성폭력

① 성폭력 피해 경험과 주요 피해 장소

‘온라인에서 성적인 욕설이 담긴 메시지(메일, 댓글, 카톡 등)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남성 중 372명(35.3%), 여성 중 298명(30.1%), 전체 총 688명(33.7%)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즉, 전체 응답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성적인 메시지를 받아 본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 경험이 가장 많은 집단은 30대 여성(109명, 36.7%)이었다. 전체적으로 성폭력 메시지를 받은 남성의 비율이 높은 것은 온라인에서 폭력적 언사를 주고 받는 남성의 문화 탓인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에서 나의 외모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불쾌한 메시지(메일, 댓글, 카톡 등)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전체 남성은 229명(21.7%), 전체 여성은 173명(17.5%)으로 전체 403명(19.7%)의 응답자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 문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20대 남성(76명, 24.4%)이었다. 외모중심주의가 극화되는 사회 변화에 따라 남성들에게도 모욕의 방식 중 하나로 외모와 신체에 대한 비하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음란물(글, 영상 및 음향파일)을 전송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남성이 619명(58.8%), 여성이 572명(57.8%)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피해 경험이 근소하게 많았으며, 총 1190명(58.2%)의 피해 경험자가 있어 그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성적 대화(채팅)를 요구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남성이 286명(27.2%), 전체 여성이 282명(28.5%)로 여성의 비율이 조금 높았으며, 총 568명으로 27.8%의 응답자들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특히, 20대 여성(81명, 30.8%)은 20대 남성(55명, 18.9%)에 비해 피해경험이 비교적 많이 높아,

20대에서는 여성들에게서 피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온라인에서 성관계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남성 중 160명(15.2%), 여성 중 91명(9.2%), 전체 총 235명(11.5%)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온라인에서 성매매(조건만남)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남성이 193명(18.3%), 여성이 83명(8.4%)으로 총 276명(13.5%)이 성매매 제안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 특히, 30대 남성(69명, 22.3%)과 40대 남성(73명, 21.1%)이 피해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는 남성의 경우 스캠 등을 통한 불법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메시지에 대한 반응일 확률이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성폭력을 가장 많이 경험한 곳은 ‘메신저’가 471명(34.2%)로 가장 많았다. 메신저는 다양한 형태의 공적, 사적, 상업적 문자메시지와 영상메시지가 전달되는 곳이기 때문에 스토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폭력도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메일’(386명, 28.1%)이 많았고, 이는 스캠을 통해 성적 상업메시지가 대부분 전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으로 ‘포털/커뮤니티’(263명, 19.1%), ‘SNS’(152명, 11.0%), ‘게임’(70명, 5.1%), ‘개인홈페이지/블로그’(29명, 2.1%), 기타(5명, 0.4%)순으로 나타났다.

② 성폭력 피해 시 대응 방법과 가해자 처벌 여부

대부분 ‘아무런 대응하지 않는다’고 답하여(609명, 44.2%)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피해자 대부분이 대응 방법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서비스신고센터 신고’가 351명(25.4%)으로 상당한 수가 온라인 성폭력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0.5%에 불과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비율(354명, 50.7%)이 높았는데 이는 남성이 온라인 성폭력에 대해 대다수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반면 여성의 경우 스토킹에서는 서비스 이용 중단이 두 번째로 높았던 반면 성폭력 피해의 경우 서비스신고센터에 신고가 두 번째로 높아 성폭력 피해는 더 심각하게 고려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피해에 대한 대응 역시 스토킹 유형과 마찬가지로 대응 방법에 대한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고나 처벌 절차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대다수가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 대응방법에 속하는 ‘신고’를 한 경우, 처벌여부와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를 알아보았다. 신고를 하고도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256명(72.5%)로 성폭력 관련 신고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게시글 삭제, 서비스 이용 차단 등의 처벌’, ‘어떠한 조치나 처벌 받지 않음’ 순 이었다. 한편 온라인 성폭력 피해 후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는 7명(0.5%)의 응답자에 불과했다. 이 중 남성 1명, 여성 1명, 총 2명(28.6%)만이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

2) 여기서 남성의 성매매 제안 받은 경험과 여성의 성매매 제안 받은 경험은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즉, 여성이 받은 제안은 성을 팔라는 것인데 반해 남성이 받은 것은 성을 구입하라는 제안으로 추정된다.

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5명(71.4%)은 처벌 받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전반적으로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은 점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다.

③ 성폭력 피해자의 감정변화

온라인 성폭력을 경험하고 어떠한 감정의 변화 및 정신적 피해를 겪었는지 알아보고 남녀 간의 성별 차이를 알아보았다. 모든 항목에서 남녀 성별간의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나타났는데, 예컨대 ‘불쑥 머릿속에 그려진다’(t=5.068 p<.05), ‘괴로운 감정이 든다’(t=5.506 p<.05), ‘온라인 활동에 대한 흥미’의욕이 떨어졌다’(t=6.938 p<.05) ‘우울했다’(t=6.121 p<.05) 모두 남성보다 여성의 평균이 높았다. 즉, 남성보다 여성의 부정적 감정과 정신적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3, 4 항목에서만 여성의 정신적 피해가 유의미하게 높았던 스토킹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높아서 온라인 성폭력이 여성에게 미치는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성폭력 피해 중에서도 성매매 제안을 받는 것은 특별히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성매매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에서 성매매(조건만남)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에 응답한 경우, 그 제안을 했던 사람은 누구인지 알아보고, 또한 그러한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떠한 감정을 느꼈는지 반응을 살펴보았다.

193명이 성매매 제안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이 중 제안을 한 사람이 ‘온라인에서 처음 만난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한 사람이 186명(67.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알 수 없음’이라고 답한 사람이 97명(35.0%)으로 대부분 알 수 없거나 온라인에서 만났지만 정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성매매(조건만남)제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의 특징을 반영하여,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제안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 이후의 감정 변화를 살핀 결과 모든 항목에서 남녀 성별간의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나타났다. ‘화가 났다’(t=-6.068 p<.05)와 ‘무서웠다’(t=-6.335 p<.05),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t=-6.099 p<.05) 모두 남성보다 여성의 평균이 높았다. 이와 반대로, ‘제안에 관심이 갔다’는 여성보다 남성의 평균이 높았다(t=4.408 p<.05). 즉, 남성보다 여성의 부정적 감정이 높으며, 이와 반대로 여성에 비해 제안에 관심이 갔다는 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보면 여성들은 성매매제안을 폭력이라고 느끼는 반면 남성들은 이를 거래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도 남성이 받은 성매매 제안과 여성이 받은 제안의 성격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명예훼손·모욕

① 명예훼손·모욕 피해 경험과 주요 피해 장소

최근 1년 동안의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피해 경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먼저, ‘나의 사적인 정보(학교, 직장, 나이, 주소, 가족관계, 과거)가 온라인에 유포된 적’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남성

중 306명(29.1%), 여성 중 198명(20.0%), 전체 총 504명(24.7%)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가 동의 없이 온라인 상에서 유포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에 대한 유언비어나 일방적인 비난이 온라인에 유포된 적'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전체 남성은 137명(13.0%), 여성은 69명(4.5%), 총 206명(10.1%)이었으며, 여성에 비해 남성의 피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친 욕설이 담긴 메시지(메일, 댓글, 카톡 등)를 온라인에서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남성이 197명(19.9%), 여성이 134명(13.5%), 총 331명(16.2%)로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채팅 및 게시글, 댓글 등을 통해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에게 공동으로 비난이나 공력을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남성 중 135명(12.8%), 여성 중 60명(6.1%), 총 195명(9.5%)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공통적으로, 20대 남성에게서 명예훼손·모욕 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년 동안 한번 이상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726명(35.5%)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상에서 명예훼손·모욕으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명예훼손과 욕설 및 비방을 가장 많이 경험한 곳으로 '포털/커뮤니티'가 235명(32.4%)로 가장 많았다. '포털/커뮤니티'는 인터넷 뉴스, 토론방, 게시판 등 다양한 의견을 볼 수 있는 곳뿐만 아니라 해당 게시글에 자유롭게 댓글을 달 수 있어, 댓글을 통해 토론을 나누면서 싸움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메신저'(183명, 25.2%) 'SNS'(141명, 19.4%), '게임'(68명, 9.4%), '메일'(56명, 7.7%), '개인홈페이지/블로그'(36명, 5.0%), 기타(7명, 1.0%)순으로 나타났다. '게임'은 채팅창이 존재하고, 폭력적인 일부 게임이 있어, 명예훼손·모욕이 자주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었지만, '10대 남성'에게서만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곳으로 나타났다.

② 명예훼손·모욕 피해 시 대응 방법 및 가해자 처벌 여부

'아무런 대응하지 않음'이 278명(38.2%)으로 가장 많았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인 대응방법보다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의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모욕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성의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한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고나 처벌 절차가 차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대다수가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응방법을 모르거나 신고나 처벌 절차가 까다롭다는 의견도 다수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과 신고 절차 간소화가 필요해 보인다.

적극적 대응방법에 속하는 서비스 센터에 '신고'를 한 경우는 19.5%,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는 1.5%이었다. 이 경우 가해자의 처벌여부와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를 알아보았다. 서비스신고센터에 신고를 하고도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80명(55.9%)로 신고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게시글 삭제, 서비스 이용 차단 등의 처벌', '어떠한 조치나 처벌 받지 않음' 순 이었다.

③ 명예훼손·모욕 시 피해자의 감정 변화와 피해

명예훼손·모욕을 경험하고 어떠한 감정의 변화 및 정신적 피해를 겪었는지 알아보고 남녀 간의 성별 차이를 알아보았다. 모든 항목에서 남녀 성별간의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나타났는데, ‘불쑥 머릿속에 그려진다’(t=-3.852 p<.05), ‘괴로운 감정이 든다’(t=-3.601 p<.05), ‘온라인 활동에 대한 흥미의욕이 떨어졌다’(t=-4.447 p<.05) ‘우울했다’(t=-5.571 p<.05) 모두 남성보다 여성의 평균이 높았다. 즉, 남성보다 여성의 부정적 감정과 정신적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대보다는 20대, 30대, 40대 여성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영상 유포

① 영상 유포 피해 경험과 피해 인지 여부

먼저, ‘내 몸의 은밀한 부분이 찍힌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된 적’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남성 중 35명(3.3%), 여성 중 16명(1.6%), 전체 총 53명(2.6%)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나의 성적 행위가 찍힌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된 적’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전체 남성은 34명(3.2%), 전체 여성은 16명(1.6%), 총 51명(2.5%)으로 나타났다. ‘내 사진이나 동영상은 온라인에 유포된 적’이 이는 경우에는 전체 남성의 13명(12.4%), 전체 여성은 59명(6.0%), 총 206명(10.1%)이었다.

성별, 연령별로 영상유포의 피해를 받을 확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영상유포 피해가 유의미하게 높았고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피해가 높았다. 영상유포를 한번이라도 당했을 확률 역시 남성과 저연령층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처럼 영상 유포 경험이 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몇 가지 이유를 추측할 수 있다. 하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영상 유포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솔직히 답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여성들이 자신의 영상이 유포된 사실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피해, 가해 경험에 대한 심층면접에서 일부 남성들은 자신들만이 아는 사이트에서 자신과 여성의 영상을 올려서 돌려본다는 사실을 들려주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남성들의 영상이 더 많이 유포되었을 수도 있는데 이는 남성들이 자신의 영상을 직접 온라인에 많이 올림으로써 유포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영상 유포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들이 해당 사진 또는 영상이 촬영되고 있었는지 알았는지를 살펴해보았는데, 총 55명 중 알고 있었다고 답한 응답자가 10명(18.2%)였으며 알지 못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45명(81.8%)로 많은 사람들이 영상이 촬영되고 있었는지 모른다고 답하였다. 해당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묻는 질문에는 총 53명 중 29명(54.7%)의 다수가 누가 촬영하여 유포했는지도 모른다고 답하였다. 이처럼 촬영유포 여부를 알았더라도, 누가 유포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

② 영상 유포 피해를 경험한 곳

영상 유포 피해를 가장 많이 경험한 곳으로 'SNS'가 14명(26.4%)이었다. 최근 'SNS' 상에서 동영상이나 사진 공유기능이 생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다양한 영상들을 포함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손쉬워졌다는 장점이 있지만, 무단 및 불법으로 영상을 유포하거나 음란성 게시물들이 공유되고 있다는 점이 초상권 침해문제 등의 문제가 되고 있다. 다음으로, '메신저'(12명, 22.6%)가 많았는데, 'SNS'와 같은 맥락으로, '메신저'를 통해 음성, 혹은 동영상이나 사진 공유기능이 편리해짐에 따라 무단 및 불법으로 많은 영상들이 유포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③ 영상 유포 피해 시 대응 방법과 가해자 처벌 여부

피해자 대부분이 대응 방법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대부분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 유포 피해 유형은 응답자 수가 많지 않아 연령대나 성별에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남성은 '서비스 이용안함'이 가장 많았고, 여성은 이에 비해 조금 더 적극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 '서비스 아이디 새로 만들기'와 '서비스 완전 탈퇴'가 동일하게 가장 많았다.

신고센터에 '신고'를 한 경우는 총 6명(11.1%)으로 다른 피해 유형에 비해 적은 응답을 보였다.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 5명으로 전체 피해자 중 9.43%로 피해자의 수가 작은 것을 고려할 때 가장 높은 비율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영상유포의 피해가 실제로 심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중 남성 1명, 여성 1명, 총 2명(40.0%)만이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3명(60.0%)은 처벌 받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5) 소결: 온라인 인권 피해 경험 현황

각 유형의 피해를 한 번이라도 당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가장 많은 피해 유형으로는 스토킹(1,428명, 69.9%)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성폭력(1,376명, 67.4%), 명예훼손·모욕(726명, 35.5%), 영상 유포(54명, 2.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토킹'과 '성폭력'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많은 응답자들이 온라인 인권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고 답하여, 많은 온라인 이용자들이 '스토킹'과 '성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성별로 보았을 때 모든 유형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피해가 많았는데 통계적으로 성별 차이가 유의미한 것은 명예훼손과 영상유포 뿐이었다. 그리고 피해의 실제적인 영향인 피해 후 심리상태를 살펴보았을 때, 오히려 여성의 피해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남녀 전체에서 심리상태의 평균을 보면 영상유포,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순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피해의 유형에 따라 심리적 충격이 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영상유포나 명예훼손이 훨씬 더 심각

한 피해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성별로 보면 영상유포를 제외한 나머지 세 유형에서 여성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여성은 스토킹, 성폭력,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후 느끼는 부정적 감정이 남성보다 높았다.

여기서 온라인 인권피해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데 피해를 겪은 후 감정을 살펴보았을 때, 여성의 정신적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명예훼손이나 영상유포는 남녀 모두에게 정신적 피해가 높지만 여성에게 더 유의미하게 높은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피해는 주로 일대일로 일어나는 스토킹이나 성폭력과 달리 나에 대한 정보가 온라인 공간의 모든 대중에게 무차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심각하며 여성의 성적 순결이나 정조를 강조하는 우리 문화에서 여성에게 훨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들은 모든 피해유형에서 온라인 활동에 대한 의욕이 떨어졌다는 경우가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아 온라인 인권침해가 여성의 온라인 활동 위축을 초래한다는 것도 시사하고 있다. 성별화된 피해 현황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유이다. 피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피해자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과 후속적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한 관찰과 대응의 필요성이 있다. 여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해결 방안들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매체의 경우 ‘SNS’와, ‘메신저’, 그리고 ‘포털/커뮤니티’ 세 곳에서 온라인 인권 침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와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네이버 등) 같이 스마트폰으로 쉽게 활용가능 한 플랫폼에서의 피해가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에 따라 ‘SNS’, ‘메신저’, ‘포털/커뮤니티’ 세 곳의 사업자와 협약을 통해 교류나 협력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온라인 인권가해 경험

지금까지 온라인에서 당하는 피해경험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온라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가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가해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가해경험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1) 스토킹

우선, 온라인 스토킹 가해 경험을 살펴보면, 문항별로 경험 비율에 차이가 크다. 즉, ‘온라인에서 관심 있는 사람의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하여 개인정보나 일상을 엿보거나 감시한 적이 있다’의 경험은 46%로 거의 과반수에 이르는 반면 ‘관심 있는 사람의 주변 사람에게 접근하여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려고 한 적이 있다’는 17.2%에 불과하며 ‘관심 있는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만나줄 것을 요구했다’와 ‘메시지가 무시당했을 때 협박한 적이 있다’는 각각 3.6%, 1.9%에 불과

하다. 이는 온라인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의 사이트를 자주 방문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일상을 엿보는 목적을 가진다면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스토킹의 가해 경험자가 가해 장소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SNS(57.1%), 메신저(15.8%), 개인홈페이지 및 블로그(13.4%)으로 나타나 피해경험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이처럼 이용자가 자신의 생활과 관련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공유하는 마이크로블로그 유형의 플랫폼인 SNS와 개인홈페이지가 온라인 스토킹 가해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온라인 스토킹 가해를 했다고 한 경우, 처벌 받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이 97.3%로 매우 높은 것으로 보아 온라인 스토킹의 처벌은 매우 저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성폭력

① 성폭력 가해 경험과 주요 가해 장소

온라인 성폭력과 성매매의 가해경험이 '있다'라고 답한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모두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 중에서 가장 의미있게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성적인 욕설을 담긴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와 '상대의 외모나 신체에 대해 언급한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는 것으로 남성의 비율은 평균 4.5%, 5.4%로 나타났는데 반해 여성의 비율은 1.2%, 1.9%에 불과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 남성의 8.4%와 11.2%가 각각 가해경험을 인정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상대방이 원치 않은 성적대화를 요청한 적이 있다'는 내용 역시 20대 남성이 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온라인에서 성매매제안을 한 적이 있는 경우'는 10대 남성의 비율이 2.8%으로 가장 높았고, 여성과는 1.5%정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성폭력 가해경험을 종속변수로 성별, 연령별로 로짓분석을 했을 때 대체로 남성의 가해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는데 성폭력 가해를 한번이라도 한 확률은 성별, 연령별로 유의미하였고 남성이 7.58로 여성 2.88보다 거의 3배 정도 높았고 연령별로도 젊을수록 큰 차이로 높았다.

온라인 성폭력 및 성매매 가해 장소로는 메신저(52.2%)가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포털과 커뮤니티도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인 15.9%로 나타났다. SNS는 12.9%로 3순위였다. 메신저와 SNS는 1:1채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성적인 욕설을 포함한 성폭력과 성매매 제안 등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② 성매매 제안 대상 및 가해 후 처벌 여부

온라인 성매매 제안 경험 중 제안 대상자에 대한 비율에서는 '온라인에서 처음 만난 모르는 사람'이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원래 알던 사람도 30.2%을 평균 차지하며, 온라인에서 처음 만난 완전히 낯선 사람뿐만 아니라, 지인들 간에도 상당한 비율로 성매매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온라인 스토킹과 마찬가지로, 성폭력/성매매 가해 후 처벌 여부 역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답한 비율이 82.9%로 가장 높았으나, 스토킹에 비해서는 신고센터와 경찰에서도 제재를 받은 경우가 약 19.1%로 나타나 스토킹에 비해서는 성폭력/성매매에 대한 처벌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명예훼손·모욕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경험이 ‘있다’라고 답한 비율 역시 남성이 여성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훼손·모욕 유형은 연령이 낮을수록 가해경험이 높았는데 명예훼손을 한번이라도 할 확률은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남성이 8.19로 여성 4.93보다, 그리고 젊을수록 유의미하게 높았다.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가해장소로는 포털/커뮤니티가 평균 32.2%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는 SNS(23.1%), 메신저(22.7%)가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한편 온라인 명예훼손 및 비방욕설 가해자의 처벌 여부에 있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답한 비율이 88%로 가장 높아, 여전히 처벌의 미비함을 보여주고 있다.

(4) 영상 유포

온라인 영상 유포 역시 남성의 가해비율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상유포를 한번이라도 할 확률은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서 남성이 3.58, 여성 1.95보다 높은 확률을 보였다. 유포 장소로는 메신저가 35.4%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게임(14.6%), 개인홈페이지/블로그(8.3%)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이용으로 급증한 메신저는 자신의 지인의 채팅창에서 빠르게 링크를 통해 유포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영상유포의 창구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유형 별 가해 후 심리 상태

인권가해 유형 중에서 영상 유포 유형이 가해 후 가장 강력하게 심리상태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영상 유포 가해 유형은 재미(2.54), 지배감(1.78), 죄책감(2.40), 걱정(2.28)에서 모두 다른 유형들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반대로 스토킹의 경우, 재미(1.74), 지배감(1.30), 죄책감(1.90), 걱정(1.90)으로 모든 심리 항목에 대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는 유형이었다. 사진, 동영상 유포의 경우가 전체적으로 심리적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친 유형으로 나타났고, 여성일수록 스토킹을 제외하고 모든 유형에 대해서 부정적인 심리(죄책감, 걱정)를 남성보다 더 강하게 느꼈으며 명예훼손·모욕의 경우에는 남녀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온라인 인권 의식 및 인권 현실

온라인 인권의식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윤리의식에 대한 남녀 간 차이도 대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대부분 유해불법사이트 및 콘텐츠, 음란물에 대한 의식에 있어서 여성과 가장 대조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이 부분에 있어서 인터넷 윤리를 바라보는 남녀 간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온라인 인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처벌 강화와 교육에 따른 시민의식 고취가 가장 많은 선택되었으며 사후적인 처벌과 더불어 예방적인 처벌 모두가 적용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인권 피해 유형 중에서는 온라인 성폭력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으며 스토킹과 성매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범죄로서의 인식이 저조한 편이었다.

주목할 것은 커뮤니티 공간에서 인권피해가 일어나는 공간으로서 가장 많이 언급된 사이트는 ‘일간베스트(일베)’로 근래에 여성혐오적 글과 이미지 게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커뮤니티가 압도적인 비율(12.5%)을 차지하였다는 점이다. 그 뒤를 이어서는 ‘일간 베스트’의 전신인 ‘디씨인사이드 갤러리’가 4.4%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되었다. 채팅앱 중 인권피해가 일어나는 공간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앱은 인스턴트메신저(Instant Messenger, IM) 유형에 해당하는 카카오톡이 6.2%였다. 두번째로는 채팅앱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고 무작위적으로 채팅을 할 수 있게 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지칭하는 ‘랜덤채팅’ 키워드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1.9%), 구체적인 랜덤채팅 앱의 이름으로는 ‘뿔단배’, ‘세이클럽’ 등이 언급되었다. 커뮤니티, 채팅앱, 포털사이트만큼 많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게임사이트와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한 구체적인 인권피해 장소에 대한 답변이 상당부분 이루어졌다. 게임사이트의 경우에는 리그오브레전드(1.5%)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두 번째로는 한게임(0.5%)이 많이 언급되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는 구체적인 페이스북 페이지 이름은 언급되지 않고, 채팅앱처럼 ‘19금/성인페이지’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0.9%).

5) 온라인 인권피해 및 가해의 발생구조

피해와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피해의 총합을 종속변수로 놓고 성별, 연령, 온라인 이용행태, 인권의식 등을 독립변수로 놓고 회귀분석을 하였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성별, 연령, 온라인 활용도, 인권의식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여성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활용도가 낮을수록, 인권의식이 높을수록 피해를 많이 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해의 총합을 종속변수로 놓고 성별, 연령, 온라인 이용행태, 인권의식과 함께 가해 후 심리상태를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누어 보았다. 여기서는 인권의식, 활용도, 심리상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권의식이 높을수록 가해경험이 낮고 활용도가 높을수록, 가해 후 긍정적 혹은 부정적 심리가 강할수록 가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해경험과 관련하여 인권의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인권의식이 높을수록 가해를 적게 한다는 것은 온라인 인권증진을 위해 인권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해의 유형별로 인권의식을 독립변수로 회귀분석을 했을 때 모든 유형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왔다. (스토킹: -.288, 성폭력: -.239, 명예훼손: -.243, 영상유포: -.247)

반면에 온라인 이용시간은 피해나 가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단지 활용도가 높을수록 피해는 작고 가해는 약간 높아지는데 즉, 온라인을 친숙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스토킹 등의 피해를 피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활용도가 가해경험을 약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가해 후 만족감이나 죄책감 등의 감정을 강하게 느낄수록 가해경험이 높다는 것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실이다. 특히 재미있다 등 만족감과 가해경험의 상관은 부정적 감정과의 상관보다 훨씬 높았다는 점에서 가해행위가 중독적임을 시사한다.

4. 심층면접 분석

1) 온라인 성폭력

온라인 성폭력은 발생 장소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볼 수 있는데, 첫째는, 채팅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채팅 기반 어플리케이션이나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온라인 채팅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모인 남성 커뮤니티 혹은 게임에서 발생하는 경우이다. PC를 이용한 온라인 게임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

(1) 게임

① 성희롱 (성적 메시지)

게임의 경우에는 온라인 채팅 이외에도 음성 채팅이 가능하다. 음성 채팅은 ‘토크온’이나 ‘게임톡’ 등 다자간 음성채팅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게임 내 음성 기능을 지원하기도 한다. 친구들과의 음성채팅은 원활한 게임 진행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모르는 사람과의 음성채팅에 활용되고 있다. 이 때 게임 진행 중 음성을 통해 성별이 밝혀진 경우, 성적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³⁾.

3) 사례: “제가 그 때 선택한 게 여자캐릭터였는데 블라우스 자체에서 가슴이 부각되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저랑 같이 같은 라인에서 게임을 하면서 계속 그 가슴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뭐 그 캐릭터 이름이 소나라는 캐릭터인데. 소나는 정말 가슴이 최고인 것 같다. 가슴이 너무 예쁘다. 저랑 말을 하면서. 육성으로. 저한테 음성 채팅을 하고 있으니까. 소나 가슴이 진짜 예쁘지 않아요? 진짜 짱인 것 같아. 진짜 큰 것 같아. 재가 제일 큰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계속 제 캐릭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문자를 통한 채팅의 경우는 스크린샷을 통해 해당 피해 내용을 증거로 삼거나 피해 내용을 파악 할 수 있지만, 음성을 통한 채팅의 경우, 음성 녹음이 어렵고 이미 피해가 일어난 사건에 대해 재 청취가 불가하기 때문에 피해 내용을 확보하거나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남성보다 언어적, 시각적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유저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게임 내에서 성폭력과 언어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게임은 남자가 하는 것이라는 편견이 제일 강하다. 특히, ‘여자는 게임을 못한다’, ‘게임은 남자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편견에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다.

② 성적 욕설

게임에서 이뤄지는 채팅 언어들은 일 대 일의 아닌 공개적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여성을 일방적으로 비하하는 언어나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희화화하는 언어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반적인 언어들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⁴⁾. 피해자들은 게임을 하다가 남성 2명에게 일방적으로 심한 성폭력 메시지와 욕설/비난 공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해당 메시지들은 모욕적인 비속어로 가득 차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일반적인 욕설, 여성의 생식기를 지칭하는 단어, 강간 위협 등이 여과 없이 전달되었다. 이처럼 게임 내 성폭력은 성적인 메시지 이외에도 채팅을 통해 협박 혹은 일방적인 욕설/비난 공격과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 사례에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를 하였고, 이를 모욕죄⁵⁾로 기소하였고 승소하였다. 그러나 모욕죄로 기소한 일이 게임 및 커뮤니티 내에서 이슈가 되면서, 피해자는 이차적 협박과 욕설에 시달리기도 했다.

현재 게임 혹은 커뮤니티에서는 수천 개의 신조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중 여성 비하나 여성을 성대상화하는 단어와 언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게임 내 이뤄지는 성폭력은 모욕과 함께 이뤄진다. 단순한 성적 메시지 이외에도, 신체 성기 언급 뿐 아니라, 행위 묘사와 함께 새로운 욕설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다수 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적 욕설과 메시지들은 정보통신망법⁶⁾과 성폭력범죄 특례 법⁷⁾에 따라 성적 욕

4) 사례: “모든 욕설이 여성형이에요. 여성비하. 실제 여자가 그걸 받아들였을 때는 분노감이 더 상승이 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애네들이 그걸 쓰고 있는 와중에 되게 심했어요. 처음부터 저한테 닉네임이 여성형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두 가지라고 보지만 그 실제로 요근래에 쓰고 있는 본인들의 언어 생활이 굉장히 여성형 욕설을 남발하는 이유기 때문이라고 저는 심증은 그런데...”

5)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

6)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

설 처벌에 적용될 수 있음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형법인 모욕죄로 처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모욕죄는 벌금형으로 성폭력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 다음 사례는 대표적인 행정 절차 상 처리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절차의 어려움이나 해당 법령에 대한 담당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기소하기 쉬운 ‘모욕죄’로 대다수 처리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그 게임 안에서 나에게 성희롱 한다 이걸로 예를 들어서 내가 수치감을 갖는다던가 충분히 이제 거의 성행동에 가깝다고 느꼈을 때에는, 이게 통신을 이용한 음란행위라고 그래서 기존의 판결이 난 게 있었어요. 제가 검색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그걸로 제가 접수를 했는데,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무조건 일단 모욕죄로 몰아버리더라고요. 분류를 하지 않아요. 아예, 그래서 접수하는 경찰이나 이런 민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교육문제가 먼저 되어 되고, 카테고리 자체도 나누지 않고 일단 모욕죄... 심지어 사이버 경찰 수사대에 가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제가 물었어요. 모욕죄인지 명예훼손인지 성희롱 죄인지 그것에 대한 분명히 명확하게 표시는 되어있는데 왜 다 모욕죄로 하느냐?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다 그냥 모욕죄로 한대라는 거예요. 그나간 굳이 그 이상을 넘어가려 하지 않는 거예요.”

③ 성매매 제언

또한, 모 게임의 경우에는 성적인 발언을 하다가 성매매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게임 내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는 이유로는, 청소년성매매의 표적이 돼버린 채팅사이트보다 안전한 탓이다. 채팅으로 인한 성범죄가 이슈화되고 그에 따른 규제가 강화되자 온라인 성매매는 온라인고스트, 포커 등의 인터넷게임으로 옮겨가고 있다⁸⁾.

④ 소결

게임에서는 문자 채팅과 음성 채팅을 이용하여 여성을 희롱하거나 성적인 욕설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 중, 문자채팅은 스크린 캡처를 통해 피해 내용 확보가 가능하지만, 음성채팅의 경우, 음성 녹음의 불편함이 있어, 문자채팅에 비해 피해 내용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게임 업체에서도 이를 협조와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언어 성폭력 이외에도 그래픽을 이용한 시각적 성폭력이 가능하다. 이에 더하여 외모지상

하게 전시한 자

-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8) 사례: “뭐 △△△같은 게임 들어가잖아요 ★★★★★이라던가... 고스톱이나 섯다 막 이런 쪽으로 친구들끼리 같이 할려고 하잖아요 맞고같은 거 이렇게 가끔? 그 쪽은 좀 아저씨들 같은 게 많이 날라와요 아바타보고, 여자 아바타 이렇게 있으니까. 어디 모텔에서 만나서 뭐... 이런 식으로 하자. 그니까 뭐 젊은 아줌마인줄 아나 봐요.”

주의에서 비롯된 여성캐릭터의 성대상화와 노출의 문제가 심각한 실정에 있다. 게임의 주 사용층이 남성이 대부분이다 보니 게임업체들에서는 여자 캐릭터의 신체를 노출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온라인 게임 내 성폭력은 여성비하 및 폄하 욕설과 함께 사용되어진다. 특히, 욕설에 여성을 비하하는 것이 많다. 이러한 욕설 중에는 신조어들이 많다.

그리고 온라인 게임에서 성매매 제안이 쉽다. 성적 메시지 전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이 일명 조건만남이라 불리는 성매매 제안이 쉽게 이뤄지기 좋은 환경이다. 또한, 성매매 보상으로 게임 아이템 등이 거래되는 등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2) 채팅

한편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휴대기기를 이용한 채팅이 일반화되고 손쉬워 지면서 이를 활용한 성폭력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

① 성희롱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의 친구 추천을 통해, 익명의 남성이 한 여성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방적으로 보내면서 피해를 겪은 사례를 보면, 해당 여성은 해당 남성에 대한 정보도 모른 채, 성행위 묘사, 혹은 성적인 단어가 포함된 채팅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받았고, 이 후 해당 남성을 차단함으로써 이 사건은 마무리되었다⁹⁾.

이처럼 채팅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대화가 가능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성희롱은 대부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언어를 포함한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내는 경우이다. 채팅을 목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성적인 단어가 포함된 언어나, 성희롱을 하는 채팅 메시지를 죄의식 없이 아무렇지 않게 행한다. 또한 온라인 성희롱은 일 대 일 채팅을 기반이라 채팅 내용에 대한 공개성이 없고,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여기며, 이에 대한 처벌 사례를 찾기 힘들어,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보다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성희롱 발언에 대해 범죄라고조차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② 성매매 제안

온라인 성매매 알선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들은 영업도 용이하고 경찰 단속을 피하기도 쉽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어 성매매 관련 정보를 간단한 검색으로 찾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

9) “카카오톡으로부터 점(.) 으로 되어있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저 죄송한데, 카톡사진 본인 이냐고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는거예요. (중략) 그 사람이 ‘기슴 크시네요’라고 하더니 ‘어디 사냐고’ 묻는 거예요... 그냥 뭐소리냐고 그랬더니, 진짜 궁금하다고,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알려달라고, 성적인 대화 조금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중략)저도 처음 듣는 그런 단어들. 젓치기? 저는 뭔지도 몰라요. 섹스는... 뭐 이러면서... 젓치기 해봤냐며, 얼굴에 싸줄게 이러면서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더 대박이었던 거는 나 지금 너랑 대화하면서 딸치고 있다고...”

너 혹은 인맥을 맺어주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역시 본래의 ‘만남’이라는 목적을 잃고 ‘즉석 만남’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러한 채팅 공간에서 난무하는 성적 회유나 성매매 제안 등에 대해 남성들은 남성의 전형적인 성욕구의 해소방안으로 설명하곤 한다. 랜덤으로 채팅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의 용도는 남성들이 쉽게 여성과 만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며, 오프라인에서 쉽게 할 수 없는 말이나, 직접 만나기 힘들으나, 온라인에서는 쉽게 말하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¹⁰⁾.

한 남성면접자는 성매매 혹은 조건만남을 하려고 채팅 혹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어플들의 성공 후기, 사례 등이 온라인 상에서 많이 공유되면서, 본래의 건전한 만남의 목적이 상실된 채 많은 남성들이 성매매나 ‘원나잇(하룻밤만 성관계를 갖는 것)’을 하기 위해 이용한다고 말하였다.

③ 소결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진지하게 이성관계를 모색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현재는 한 순간의 쾌락이나 정복욕의 성취를 위해 채팅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본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성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이용 빈도가 높고 성적인 언어를 포함한 언어들의 사용이 잦아지면서, 이용자들은 성희롱적인 메시지와 성적 언어에 무뎌지고 익숙해진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성희롱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며,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대다수이다. 같은 맥락으로 피해를 당한 여성들도 불쾌하지만 이것이 범죄가 될 수 있는지 확실치 않고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지 않으리라는 의구심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

(3) 피해 상황

온라인 성폭력 피해의 경우, 다양한 유형으로 피해 상황이 나타났다. 크게, (1) 피해 플랫폼 이용 중단, (2) 온라인 이용 행태 변화, (3) 여성으로서 자존감 하락 (4) 개인신상정보에 대한 불안감, 등 정신적, 물질적으로 다양한 피해 양상을 보인다.

① 피해 플랫폼 이용 중단

정신적으로 성폭력 피해 경험이 클 경우, 피해를 경험했던 플랫폼이나 그와 비슷한 플랫폼들을 영구 탈퇴하거나, 일시 중단하는 등의 회피 현상을 보인다. 이는 해당 플랫폼에서 다시 비슷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중단하거나, 해당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떨어

10) “실제로 만나서 여자를 꼬시기 어려운데 온라인으로 꼬시기는 훨씬 쉬워요. 왜냐면 여자들이 훨씬 더 방어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만났을 때는 말 그대로 오늘 저랑 나가서 술한잔 하실래요? 지금 이 말을 여기서 하기는 어려운데 핸드폰으로 하기에는 되게 쉽단 말이예요. (중략) 똥단배나 1키로는 이런 거에서는 대화를 쉽게 던지죠.”

어진 것에서 비롯된다¹¹⁾. 본인이 이용하고 싶지 않을뿐더러 다른 여성들에게도 위험하다고 알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많은 피해 여성들이 자신이 피해를 겪은 플랫폼이나 이와 비슷한 플랫폼에 불편함을 느끼고,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플랫폼의 사용을 중단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온라인 성폭력으로 인해, 해당 플랫폼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정신적 피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온라인 이용 행태 변화

한편 온라인을 이용, 활용하던 습관 혹은 행태들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이 모르는 사람 아예 처음부터 차단하는 습관, 혹은 게임을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하고는 게임을 하지 않는 등의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는 카카오톡과 같은 대중적인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거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밝혔고,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해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어 올 경우, 이용자 차단을 시켜 더 이상 채팅을 진행할 수 없게 막는다고 하였다¹²⁾. 한편 게임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욕설과 성적 메시지를 받은 이후, 해당 게임을 할 경우, 모르는 사람들과는 게임을 함께 하지 않게 되었다. 이처럼 평소에 온라인을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다가 해당 피해들을 겪고 나서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 이용 습관 혹은 행태들에 변화를 겪는다, 특히, 소극적인 온라인 행동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였다.

③ 여성으로서 자존감 하락

대부분의 온라인 성폭력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경험하는 것이 대다수이다보니, 온라인을 이용할 경우, 여성이라는 점을 숨기거나 감추는 등의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이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보이는 자신의 이름 또는 닉네임이 여성일 경우, 성적 희롱의 대상이 되기 쉬운 것 같다며, 자신이 여성인 것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사진을 올리는 등의 자신의 정보를 감추는 것이 편하다는 반응이 대표적이다¹³⁾. 많은 피해 여성들은 자신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온라인 성폭력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자신이 여성인 것을 숨기거나 감추는 등의 양

11) “제가 뭐 종종 게임 리뷰 같은 것도 쓰고, 간담회 같은 것도 자주 다니고 그랬어요. 워낙에 그런 걸 좋아해서, 게임도, 근데 모든 것이 다 무서워지잖아요.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가장 무서웠던 것은 뭐였냐면, 여기서 만나고 있는 누군가가 거기서 욕을 하거나 저를 그렇게 스토킹하거나, 욕설을 보내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점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중략) SNS 같은 경우에는 친구추가를 이제 안받아요, 퍼블릭도 안올리고, 트위터는 끊었고요, 카스도 안해요.”

12) “그 일 때문에 카톡 삭제했었어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다시 가입을 한 건데, 왜냐면 친구들이랑 카톡을 통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카톡을 안하니깐 너무 소외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주일 뒤에 계정만들어서 다시 가입했죠. 뭐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바로 차단부터 해요. 그냥 대꾸도 안 해요.”

13) “제 이름이 일단 중성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중략) 그 때 일 때문에 제 사진 안 해요. 웬만하면 얼굴 사진 안하고 그냥 배경? 어디 놀러갔을 때 배경 사진으로 하거나 여자라는 신분을 좀 숨기려고 하는 편이에요.”

상을 보였다. 즉, 자신이 여성인 것을 숨기는 행동은 온라인 성폭력 피해로 인해 여성으로서 자존감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④ 개인신상정보유출에 대한 불안감

또한, 온라인 성폭력을 경험할 경우,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를 더 알아내어, 메일이나 쪽지를 통해 2차 피해를 경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 일명 ‘신상 털기’를 통해 개인 정보가 공개되거나 공유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피해자들이 이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 언급한다.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이 겪었던 피해가 되풀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이 때문에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공유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고 할 만큼 큰 정신적 피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⁴⁾.

(4) 대응 현황

① 피해 플랫폼 신고 / 경찰 신고

온라인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차후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 방식으로 피해 플랫폼에 신고하거나 사이버 경찰청과 같이 경찰에 신고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피해 플랫폼에 신고하는 경우, 그렇다한 처벌 내용이나 처리 내용을 알 수 없는 등의 불편함을 겪는 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따라서 피해 플랫폼에 신고를 해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사이버 경찰청이나 경찰에 신고를 하여 처리한다고 하였다.

특히 경찰 신고의 경우 여러 가지 이슈가 도출되었다. 한 사례에서는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해당 여성은 수사관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혜택을 받았다고 언급하였다. 보통 남성 수사관이나 해당 피해에 관심이 없는 수사관들은 온라인에서 겪은 피해 자체를 가볍게 보고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즉, 수사관에 자질이나 성격, 능력 등에 따라 사건 처리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¹⁵⁾.

사법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 해당 여성은 성폭력에 대한 정신적 피해가 컸기 때문에, 이를 성폭력으로 처벌하고자 원했으나 ‘모욕죄’로 처리되어 소소한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에 대해, 여성은 온라인에서 겪는 성폭력에 대해 확실히 처벌 가능한 법을 마련하거나, 있다면 누구나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에 의한 처벌 사례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14) “일단 제 개인정보는 명함 같은 거 다른데다가 안 뿌리고요. 사이트 같은데 가입하면은 필수로 체크하는 데가 있고 선택으로 체크하는데 가 있어요. 저는 옛날에는 모르고 다 체크했어요. 사이트에 가입을 해야 하는 게 있다면 체크를 해야겠지만, 3자한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체크를 안 하게 되고 그렇죠.”

15) “그래서 발단은 그랬어요. 갔더니 그래도 다행히 여성경관님이 받아주셔서 여성경관님이 이 걸 진지하게 받아주셔서 심하네요.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저한테 상담메일 같은 게 오는데, 직접 수사관하고도 통화한 적이 있어요. 피해자가 남성인데 뭐 이런 것 가지고 그러냐고 이거 성립 안 한다고 막 이런 거예요. (...중략...)”

대체로 인터뷰에 참여한 사례의 경우 성폭력에 의한 법적 절차가 처리 되지 않고, 모욕죄로 처벌되었는데, 이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44조 7의 1항(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과 같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단순한 성폭력적 메시지만으로는 처벌된 사례도 적고, 성폭력적 메시지는 모두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법이 존재해도 범죄 예방이나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한 방어기제로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온라인 성폭력에 관련한 법들이 제대로 마련되는 것에 노력을 할 필요가 있으며, 마련 뿐 아니라 제대로 실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해당 플랫폼의 신고 센터에 문의한 경우에도 해당 업체의 소극적 대응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대응책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플랫폼에 신고 센터가 없는 경우도 많고, 있더라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많은 피해자들이 답했다¹⁶⁾. 또한 최근에는 신고 기능이 많이 발전되었다고 하지만, 신고 과정이 복잡하거나 절차에 대한 설명이 부족 하는 등, 신고 기능이 불편하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어떤 경우는 신고 기능은 간단한 방법으로 가능하지만, 신고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기술할 수 없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다른 여성은 신고가 처리되더라도 플랫폼의 처벌조차 미비하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결국 각 플랫폼의 신고 기능만 제대로 작동이 되더라도 사소한 피해를 막거나, 피해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② 지인 및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지 않음

그런데 피해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신들의 가족, 지인, 커뮤니티 등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하거나 이를 숨기려는 양상을 보였다. 피해 후 여성으로서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자신이 겪은 성적 수치심에 대해서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었다¹⁷⁾. 문화적 요인들이 피해의 해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대응하지 못함

피해자들이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일이 커질 것이라는 두려움과, 자신에 느꼈던 성적 수치감 등, 남들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감정이 더 크기 때문에 신고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다¹⁸⁾.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은 정신적 피해를 받았지만, 다

16) “상대방의 비하, 욕설, 비방, 이런 부분들이 게임사의 모든 약관에 들어가 있어요. 게임사들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제가 인제 그런 적도 있었어요. 계속 게임사에다가 문의를 넣었어요. 처리중... 처리중... 인거예요”

17) “일단 친구들한테 말하기가 좀 꺼리지더라고요. 왜냐면은 약간 여자로서 수치심도 느끼고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괜히 말씀드리면은 그런 걸 왜 거래 하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겠죠. 그리고 도 괜히 일이 커지면, 어떻게든 그 사람하고 또 연관이 되어야 하는 거니깐, 저는 그거 자체가 너무 싫어서 일부러 아무렇게도 안했어요.”

18) “그래서 바로 차단하고 저는 어우... 어우... 이게 난 카카오톡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아는 친구, 지인들만 당연히 나한테 얘기를 할 수 있고 친구 추천 통해서도 날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다짜고짜 성희롱을 하니깐 대개 당황스럽고(중략) 신고를 할 까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경찰들도 이렇게 느끼는 수치심도 약간 상대적인 거라서. 경찰이 대부분 남자들이기 때문에 고작 이런 것 가지고 신고를 해? 라고 좀

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피해 상황에 대해 가볍게 생각할 것이라는 오해와 자신이 너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해결하기 보다는 그 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은 마음등이 이러한 무대응에 영향을 준다. 결국 현재도 온라인 성폭력 피해 상황에 숨기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적극 대응 할 수 있도록 대응 방법의 간소화,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동일시하게 처벌, 경찰들의 적극적 수사 등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등이 필요할 수 있다.

2) 온라인 명예훼손

(1) 발생 매커니즘

본 연구에서 발굴한 온라인 명예훼손의 사례는 특히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관련된 것으로 오늘날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온라인 인권피해 유형이다. 즉,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자신의 소셜미디어의 가치를 올리는 수단으로 젊은 여성의 사진을 도용하고 나아가 그 여성에 대해 거짓된 정보를 올린 사례가 있다. 본 사례는 페이스북에서 ‘19금)△△페이지’라는 음란성 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이 한 여성의 페이지에서 그 여성의 동영상상을 가져다가 마치 그 여성이 그 페이지 안에 있는 다른 선정적인 인물과 동일한 것처럼 배치한 것에서 시작하였다¹⁹⁾. 사실상 ‘19금’이라고 표시된 페이스북 내 페이지에 일반인의 동영상상과 사진이 이러한 페이지에 링크되거나 올려 질 경우, 일반인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러한 페이지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자신도 ‘포르노 배우’일 것이라는 맥락으로 받아들여지게 해 자신의 명예를 크게 훼손 받게 된다.

문제는 이처럼 남의 페이지에 올라간 자신의 영상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현재 국내에서의 천문학적 이용량에도 한국 지사인 페이스북 코리아의 직원을 현재 25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불법적 이용에 대한 적절한 신고 장치와 대응인력이 없다. 또한 한국의 공공기관은 해외 기업인 페이스북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 만약 이와 같은 명예훼손이 발생했을 때 해당 페이지의 운영자가 도용한 명예훼손 게시물을 직접 내리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하여 게시물을 내릴 수 없는 뚜렷한 주체가 없다. 본 사례에서는 해당 페이지의 운영진이 계속적으로 게시물을 내리는 것을 거부하여 피해자가 최후의 방법으로서 온라인 여론을 이용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런 경우 운영자를 적절하게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자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보복성의 명예훼손 2차 가해를 시도할 가능성도 생긴다.

상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신고는 안했어요.”

19)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제가 동영상을 올렸어요. 제 얼굴이 나오는 셀프 동영상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남자 친구가 제 사진이 19금 페이지(페이스북 19금)△△페이지에 올라왔대요. 그래서 봤는데, 올라온 내용이 ‘이 분 가지고 싶으면 좋아요’를 누르라는 이런 식의 글이었어요...”

(2) 피해 상황

이러한 사례의 명예훼손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의 젊은 여성인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아직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하고 미숙하여 종종 이러한 피해 대응에 있어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물론 피해에 대해 많은 방법으로 대응을 시도하려고 하지만, 해당 플랫폼의 효과적이지 않은 신고기능, 사이버 경찰청의 미대응, 해당 수사관의 무감각한 대응으로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피해처리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공공기관과 인터넷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대응시스템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강한 불신이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응을 막고, 신고의지도 하락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²⁰⁾. 피해자는 이러한 열악한 대응환경에서 피해처리를 받지 못하여 자신이 오히려 ‘조심’해야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피해 여성의 온라인 활동 자체를 스스로 위축해야 하고 ‘차단’이라는 기능을 번거롭게 사용하여 온라인 활동에 대한 자유로움을 앗아가는 피해를 오로지 자신이 받아야 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여성이기 때문에, 온라인 활동을 더 위축하게 만드는 것으로 여성으로서의 피해가 당연시되는 분위기에서 여성의 소극적인 온라인 활동을 더 부추기게 만들게 하고 있다.

(3) 대응상황

페이스북에서 이러한 일을 겪을 경우, 피해자들은 일차적으로 이용한 사이트인 페이스북에 먼저 신고를 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딱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고, 소극적인 신고 시스템이 있기는 하나, ‘타당하지 않은 이유다’라는 연유에서 게시물을 내려달라는 요청이 거절되었다고 피해자는 술회하였다. 신고기능이 작동하지 않아도 페이스북에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창구에 피해자는 ‘자신의 사진이 함부로 (어떤 불쾌한 페이지에) 올라왔다’라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페이스북 측에서는 묵묵부답이었다고 답했다²¹⁾. 때문에 면접자는 페이스북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으며 이뿐만 아니라 무방비로 페이스북 내 유통되고 있는 음란, 불법 콘텐츠에 대하여 더욱 페이스북이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소셜 미디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 내용의 신종 명예훼손은 현재 소셜미디어의 사적 내용의 사진과 동영상이 무단으로 도용될 수 있는 거칠 것 없는 ‘공유’ 시스템

20) “부모님한테 알려봤자, 딱히 좋을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언니정도(가족)에게 말했어요. 반응은 할 대박, 미친 거 아니냐는 반응 정도. 저희 언니도 뭐 신고 해봤자 안 되는 것 아니까. 그냥 댓글도 다 그런 식이에요. 누나. 어차피 이런 거 해봤자 아무런 소용도 없어요. 다 이런 거니깐. 그거 보면 힘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신고하고 싶다는 마음도 사라졌죠.”

21) “그게(페이스북 신고를) 할 방법이 없어요. 봤는데 전화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그 페이지를 신고할 수 있었거든요. 신고했어요. 했는데 근데 타당하지 않는 이유라고 거절당하고. 전화해서 신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 페이지에 더보기 누르면 ‘신고하기’가 있거든요. 신고 딱 했는데 다시 돌아오는 메시지가 뭐 타당치 않는 이유로 신고가… 저는 음란물에 체크해서 신고했는데 다 거절당하고… 그러니 그 페이지는 절대 못 없애는 거죠.”

과 선정적이고 음란한 페이지 운영에 대한 제재 조치의 부재, 국내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의 부족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

3) 온라인 스토킹

(1) 발생 매커니즘

조사된 두 사례의 스토킹 가해자들은 여성의 것으로 드러난 연락처로 전화, 문자, IM 메시지 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연락을 취해오며 여러 가지 성적요구(성희롱, 성매매제안)를 하였다. 여성들은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호회 활동이나 인터넷 직거래 등 순수한 동기로 가입하고 이용하였다가 등록된 자신의 연락처를 통해 스토킹을 당하면서 생활에 불편을 겪는 동시에 온라인 활동에 대해서도 위축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공통적으로 피해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 정신적인 충격과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에 대해 제대로 지인이나 가족에게 알리지 못하였고 수사 및 신고 시스템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자신이 겪은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기 위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례의 경우 피해자 여성은 차단조치로 가해자와의 연락을 중단한 이후 3~4개월이 지나서 다시 가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이는 가해자가 그녀의 핸드폰 번호로 싸이월드 주소를 알아낸 데에서 비롯하게 되었다. 가해자는 피해 여성에게 싸이월드를 통해 다시금 이전 제안했던 성매매(조건만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냐는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2) 피해상황

온라인 스토킹의 일차적 피해는 자신의 연락처를 알게 된 익명의 누군가가 자신에게 성적 대화와 성매매를 요구하는 등 집요한 연락을 하게 된다면 여성에게는 매우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피해자들은 당황스러움과 공포 등을 느끼게 된다. 다른 유형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피해 여성들은 공황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를 방지하여 정신적 위협에 계속적으로 노출되게 되게 된다. 온라인 스토킹 이후에 겪은 부정적인 감정은 온라인 활동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 여성들은 온라인 스토킹 피해 경험을 통해 자신은 상대가 누군지 알 수 없으나 자신을 언제든지 성적으로 해할 수 있는 위협적인 인물이 자신의 거취와 자신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큰 불쾌감을 느끼게 되고, 일차적으로 이러한 이유에서 온라인 활동을 피하게 된다.

(3) 대응상황

다른 유형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 경찰이 잘 처리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명예훼손 사례처럼 주변의 조언에 의해서 형성된 인식이라기보다는 온라인 스토킹이라는 인권침해이자 범죄 자체가 피해자에게 ‘물리적’ 혹은 ‘신체적’ 피해를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연유한 것이었다. 또한 경찰들이 남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에 대해 잘 이해를 해줄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컸다. 오히려 이런 범죄사실을 경찰관 앞에 말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수치심을 느끼기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2차 피해에 대해 걱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를 신고하는 과정과 절차가 복잡할 것, 신고과정에 대한 부담을 모두 피해자 개인이 지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온라인 스토킹 처벌이 전혀 피해자에게 이득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누군가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경찰이 익명성을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증거 불충분으로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었다.

때문에 이러한 온라인 스토킹 발생에 있어서 여성들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교육,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관련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신고시스템의 간소화와 접근성 향상 등을 통해 여성의 온라인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영상/사진 유포

영상유포는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초상권이나 사생활권의 침해에 해당되며 여성의 허락 없이 영상 및 사진을 찍거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가 현행법상 명백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²²⁾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음란 동영상과 사진 유통을 검열하는 데 있어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 이러한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회적인 저조한 인식에 의해 영상/사진 유포에 의한 여성의 인권침해는 아주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남성 면접대상자들에 의하면 주변에서 여성과 성관계 영상을 찍어서 여성 몰래 인터넷에서 공유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모바일 기기의 발전은 사진과 영상 촬영을 손쉽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사진과 영상의 유통 자체의 용이하게 만들었다. 모바일 기기에서 이용되고 있는 앱형태의 IM들(예: 카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등)의 단체 채팅창을 통해 영상과 사진은 매우 빠르게 전송되고 공유되고 있는데 그 용이성으로 인해 불법음란콘텐츠의 공유와 유통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22) 관련 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아래와 같이 적시되어 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식을 할 수 없는 데에 주된 배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²³⁾.

면접자는 자신이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사실을 남성들 사이에서 자랑하고 이를 즉각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것이 유포의 가장 주된 동기라고 설명했다²⁴⁾. 더욱이 이러한 사진과 동영상에 나온 여성의 신상을 알아보는 것도 매우 쉽다. 남성들은 카톡과 같은 채팅방에서 여성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돌려보고 그 이후 여성들의 신상까지도 공유하게 된다고 말했다.

‘아메’라는 이 유포사이트는 일종의 새로운 사이트로 남성들이 가진 성관계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관한 사진과 동영상을 서로 공유하는 사이트로 남성들 간의 이러한 성관계 사진/동영상이 유포되는 새로운 형태의 창구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²⁵⁾.

여성들의 신체나 성행위를 ‘도둑 촬영(도촬)’하여 그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성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남자 청소년들이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찍은 사진을 포털사이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예: 네이버 N드라이브, 다음 클라우드)로 공유하는 사례가 발각되기도 하였다. 약 20명 정도의 여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된 이 사건은 여학생들에게 많은 충격과 불쾌감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학생들은 더 화가 났다고 말했다. 심지어 남학생들에게 벌을 주는 것 보다는 여학생들에게 ‘짧게 치마를 입지말 것’을 요구하기도 하여 여학생들은 선생님과 학교 측에 대해서 분노와 실망을 느끼기도 하였다²⁶⁾. 청소년기에서 겪은 이러한 경험은 성인이 된 후에도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남성들은 여성들의 신체와 성행위를 몰래 찍어 공유하고 이를 유포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여성들은 이러한 문제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다시 겪을 수도 있으니 오히려 ‘자신이 조심해야 한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어 예방과 처벌이 사회적으로도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해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구조를 양산하도록 할 수 있다.

이상의 문제들은 음란동영상 유포를 조장하는 인터넷 채널들을 적절히 단속하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는 현재의 수사 및 처벌 시스템의 부재와 더불어 인터넷 이용자들의 저조한 윤리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무분별한 사진과 영상유포는 초상권, 사생활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명예훼손과 같은 다른 유형의 인권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일반적인 동영상

23) “옛날에는 이제 이게 공급한 것들 음란물이나 하얀튼 이런 것들을 유통하기가 되게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쉽게 그냥 도메인 주소만 붙여넣기만 해도 거기로 바로 연결이 되고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중략) 토렌트가 다운로드 시스템이 발달되어서 주소만 붙여넣고 자기가 공유하고 싶은 자료를 쉽게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런(일반인 여성들의 몸과 성관계를 찍은) 영상이 정말 많아요. 진짜.”

24) “동의안하면 여러 가지 그 자세 체위가 있잖아요. 여자가 이쪽을 보는 어떤 체위를 할 때... 요즘은 찍을 때 소리도 안나요... (중략) 이걸로 찍으면 모르거든요... 그러니깐 이런 체위를 할 때, 채팅방 이런데 막 뿌리거나 막 보여주거나, 누구와 누구랑 찍던 그게 자랑이니까.”

25) “그게 유포 커뮤니티라고 ‘아메’라고 있어요. 구글에서 ‘아메’라고 치면 트윗이 나오고 거기에 들어가면 그런 유포 커뮤니티가 꽤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서, 그게 또 도메인이 해의 도메인이라 우리나라에서 잡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처벌 하거나 잡기는 힘들어요.”

26) “학교에서 말하는 것 아니면 저희는 뭐 할 방법이 없으니깐. 그런 일이 생기면 치마가 짧으니까 너네가 조심하라고... 선생님들이 여자애들 보고 조심하라고... 아이들이 저희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할 때도 솔직히 이게 가식인지 진심이 담긴지 그냥, 학교에서 시킨 거예요...”

성적으로 이용되고 공유되는 과정에서 여성을 희롱하는 말들이 포함됨에 따라 온라인 성폭력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음란 사진 및 동영상의 유포의 문제는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으로 인식하는 강렬한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유사하게 따라한 성범죄, 성매매까지도 이어지게 한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영상/사진 유포 자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적절한 사법구조와 온라인 윤리의식 정립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및 인터넷 사업자 등의 적극적인 공동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 여성들이 경험한 온라인에서의 인권피해 현황을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통해 알아 보았다. 온라인에서 스토킹, 성폭력, 명예훼손·모욕, 영상유포 중 한번이라도 피해를 당할 확률은 전체에서 85.0%로 대부분의 사람이 한번 정도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스토킹’과 ‘성폭력’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많은 응답자들이 온라인 인권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고 답하여, 많은 온라인 이용자들이 ‘스토킹’과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84.4% 여성이 85.4%로 여성이 온라인 인권피해를 경험할 확률이 남성보다 1%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명예훼손·모욕(남성 59.2%, 여성 40.8%)과 영상유포(남성 3.8%, 여성 2.0%)에서 남성이 피해를 입을 확률이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여성은 스토킹, 성폭력,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후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받는 경우가 남성보다 높았다. 특히 피해 경험 이후의 심리적 영향을 묻은 항목 중 남녀 간 차이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문항은 피해를 입은 후 ‘온라인 활동에 대한 흥미와 의욕이 떨어졌다’로 온라인 인권피해 경험 이 여성의 온라인 활동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여성의 인터넷 공론장의 동등한 참여를 방해하는 기제로서 온라인 인권 피해가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온라인에서 여성들에게 일어나는 인권피해의 가장 큰 특징은 여성의 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상대가 여성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접근을 하게 되어 발생하는 것이며 처음에는 여성을 찾으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성임을 안 순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대화의 목적이 달라지고 나아가 새로운 목적의식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를 흔히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에서 여성에게 일어나는 인권침해는 성폭력이라는 공통적인 맥락을 가지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성폭력 외에도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영상유포 등의 인권침해의 유형들이 존재하지만 앞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이러한 사례들은 대부분 성폭력적인 맥락과 닿아있다. 예를 들면 스토킹은 결국 성매매 제안이라는 성폭력과 연결되게 된다. 또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욕은 성적 욕설 등을 통해 일어나 성폭력과 같은 유형이 되는 경우가 많다. 명예훼손에서도 여성의

성적 행위나 의도에 대한 거짓사실을 알림으로써 결국 이 여성의 성적 결정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성폭력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됨을 볼 수 있다. 영상유포는 단순히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앞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여성의 사적인 부분이나 성적 행위를 촬영해서 유출함으로써 성적 존엄성을 해치게 되어 결국 성과 관련된 폭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여성의 성을 비하하고 대상화하는 시각과 관행을 드러내며 이러한 오래된 관습이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문화 속에서도 바뀌지 않으며 오히려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응 방법에 대한 결과들은 보면, 설문 조사에서도 심층 면접에서도 온라인 여성 인권침해에 대해 우리사회가 무방비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여성들은 온라인 인권피해를 당하게 되면 너무 당황하여 어떤 대책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대화를 중단하거나 사이트를 나와 버리게 된다.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아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해가 없을지 고민하게 되는데 가부장적 사고가 지배하는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여성들의 이런 우려는 용기를 가지고 사이트 운영자나 경찰에 신고했을 때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 사이트 운영자에게 신고를 하더라도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받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무엇보다 경찰에 신고했을 때 담당경찰관의 무관심 혹은 인식의 결여가 해당 여성들을 절망시킨다. 온라인 인권침해의 특성이 주로 언어에 의해 일어나는데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이를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의 법체계에서 온라인 인권침해에 적용될 수 있는 법령들이 존재하지만 담당 경찰이나 검찰은 이를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신고자가 관련 법령을 주지시키더라도 담당자는 관행적으로 모욕죄만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구성원의 의식전환에서부터 사이트 운영자와 사법당국의 노력까지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남겨져 있는 현실이다. 정확한 현실 파악을 바탕으로 하여 다방면의 대안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개선방안

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문화정책센터장)



1. 서론

본고에서는 앞서 온라인에서의 여성 인권침해 현상 발표에 이어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그리고 시민운동 차원의 노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온라인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 스토킹, 명예훼손, 영상유출 등 인권침해 현상은 그 빈도와 강도에 있어 이미 관용의 정도를 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사회에서는 이러한 온라인 인권침해의 현실에 여전히 무관심하다. 우선 윤리적 해이부터 범죄라고 부를만한 사건들까지를 포함한 온라인에서의 무질서와 혼란의 현황에 대해 문제의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설문조사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인터넷 이용자가 한번이라도 인권피해를 받을 확률은 85.3%이다. 이처럼 인권침해의 상황이 심각한데도 이러한 피해는 피해자 개별적 차원에서만 느껴질 뿐 누구도 전체적 상황을 그려보지 않았고 따라서 이슈화되지 않았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이러한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일 것이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한 인권침해는 온라인 공간을 오염시키고 있다.

온라인에서 인권침해의 원인과 관련해서 크게 형사체계 등 규제의 측면, 정책적 측면, 법령의 측면, 문화적 측면, 그리고 교육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재 범죄로서의 온라인 인권침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벌되고 있는가, 그리고 피해자가 잘 보호되고 있는가, 온라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온라인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는가, 인권침해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은 존재하는가, 그리고 온라인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가, 네티즌들의 인권의식은 잘 형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공교육과 시민교육을 통해 온라인 인권의식을 교육하고 있는가 등을 검토함으로써 인권침해의 원인과 더불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2. 온라인 인권침해 관련 규제의 문제점

온라인 인권침해의 규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첫째, 불법·음란물 콘텐츠의 유통이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콘텐츠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온라인 이용에 있어 개인에게 가해진 폭력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가해자를 처벌하는 폭력 처벌의 두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불법·음란 콘텐츠 규제는 이러한 콘텐츠를 차단하는 것으로 포털사이트 같은 인터넷 서비스 운영자 차원에서도 가능하고 좀 더 공적인 차원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서는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규제 차원에서 게시물의 불법성이나 유해성을 심사할 수 있고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여기서 불법정보에는 “명예훼손·모욕·초상권 침해, 개인정보 노출, 음란성, 저작권 침해”가 있고 유해정보로는 “청소년 유해, 사이버 폭력, 비방/비하/욕설” 등이 해당된다. 특히 여성인권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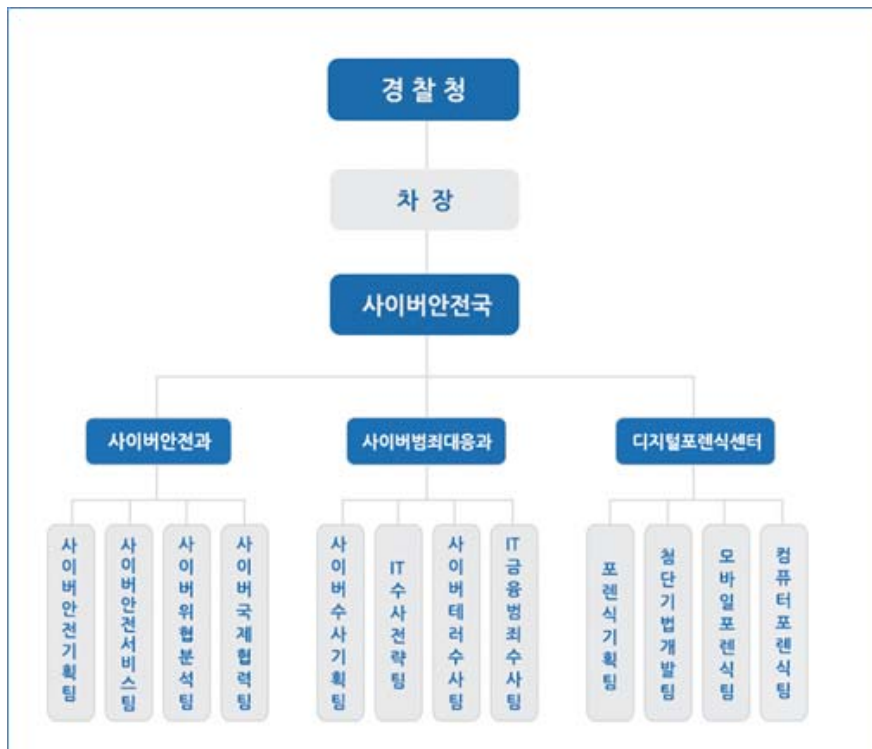
와 관련해서는 “성매매, 몰카, 성폭행, 성기, 유두 및 여성의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게시물(네이버, 2014)” 정도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포털 사이트의 내용 규제는 당사자나 제3자의 신고나 포털 사이트의 모니터링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처리 방법은 게시물을 내리거나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한 블로그/카페 접근제한이나 폐쇄, 불법 정보의 노출 제한, 그리고 상습적 위반자의 서비스 이용제한이나 계정 폐쇄 등이 있다.

포털사이트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물 규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독립적 심의기구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정보를 심의하는데 이는 “음란,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해킹, 바이러스 유포,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위반, 도박 등 사행행위,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관련 정보(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사례집, 2014, 8)”를 말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이용자 혹은 관계기관의 신고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체 모니터링에 의해 시작된다. 불법정보로 판정될 경우 해당 사이트에 이를 통보하면 사이트 운영자가 게시물을 내리는 것으로 불법정보를 제거하게 된다.

첫 유형인 인권침해적 콘텐츠의 차단은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 이용자수가 많은 대형 포털 사이트에는 신고센터나 고객센터가 있어 해당 페이지에서 신고기능을 이용하거나 메일, 전화를 통한 고객센터의 이용도 가능하다. 단, 이러한 신고센터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신고처리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거나 그럴 경우 신고가 처리되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려주지 않는 것 등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포털사이트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두 신고를 할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는데 이는 게시물 같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 사람 사이에 메일이나 채팅을 통해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이 통로를 통해서 해결이 불가능하다. 또 이 차원에서의 규제는 콘텐츠의 차단에 한정되고 형법에 의한 가해자의 처벌은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영상유포의 경우 일단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은 순식간에 SNS등을 타고 퍼져서 특정한 사이트에서 내리는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영상유포가 개인의 인격이나 경제 등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고려하면 이는 심각한 범죄이고 경찰수사를 통해서 처벌되어야 한다.

앞의 실태조사 보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많은 인권침해는 두 번째 유형인 폭력에 해당되고 채팅방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같은 SNS에서 두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적용될 수 없지만 성폭력, 스토킹의 범죄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범죄들과 같이 경찰체계를 통해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등 직접 나서야만 한다. 이처럼 피해 당사자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은 사건의 처리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우선 피해자들은 당황하기도 하고 신고체계에 대한 지식이 없어 신고를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이런 경우 경찰청의 온라인 범죄 신고센터나 아니면 지역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경

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 이는 다음의 형사체계상의 몇 가지 문제점 때문으로 보인다. 첫째, 현재 형사체계상 경찰청에 온라인에서 성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폭력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 현재 온라인 범죄는 사이버안전국(구 사이버수사대)이 담당하고 있는데 해킹, 바이러스 유포와 같은 사이버 테러형 범죄, 통신/게임 사기, 불법사이트 운영, 개인정보 침해, 불법복제 등 경제와 관련된 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온라인 성폭력은 주변적인 이슈로 다루어질 뿐이다.



[그림 1] 사이버 안전국의 조직도(경찰청 홈페이지)

실상 사이버안전국의 홈페이지에 있는 ‘사이버 범죄의 분류’를 보면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불법 콘텐츠 범죄로 나누어지는데 사이버 음란물,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이버 스토킹은 불법 콘텐츠 범죄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사이버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또한 Q&A란에 보면 두 사람 사이의 사적인 문제는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적시하여 사이버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전혀 고려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조직의 문제이기도 한데 경찰청의 조직에서 온라인 성폭력은 오프라인 성폭력과 함께 성폭력 특별수사대의 관할로 되어 있고 이 곳에서는 온라인에서의 성폭력은 다시 주변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온라인 성폭력이 실제로 처벌되기 어려운 상황은 다음 온라인 성폭력 신고에 대한 경찰청의 처리 통계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즉, 2012년부터 2014년 2월까지 온라인 성폭력, 스토킹, 협박, 공갈 사건의 발생건수는 모두 4,728건이었는데 그 중 검거 인원은 4,664명,

구속 인원은 21명, 즉 구속율 0.4%에 불과했다. 신고를 했는데 사건으로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까지 고려하면 온라인 인권침해가 법적 처벌로 이어질 확률은 대단히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 온라인 인권피해 경찰 조치 현황(2012-2014.02)

구 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구속	불구속
년도별						
12년도	성폭력	602	538	348	6	342
	사이버스토킹	976	868	560		560
	협박·공갈	1,282	1,099	704	1	703
13년도	성폭력	482	429	364	7	357
	사이버스토킹	847	642	482		482
	협박·공갈	1,217	944	680	3	677
14년 2월	성폭력	49	38	27	3	24
	사이버스토킹	64	42	30		30
	협박·공갈	128	64	45	1	44

출처: 경찰청 내부자료

둘째, 일선 경찰관과 검사들의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이는 전담부서의 부재와도 연관된 것인데 온라인 인권침해를 신고할 경우 결국 해당 지역 경찰소로 연결이 되는데 일선 경찰관들은 이러한 신고사항을 심각하게 간주하지 않아 사건으로 접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신체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언어적 폭력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데 본 연구에서 드러난 것처럼 언어적 폭력이 심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동의가 낮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판례를 보면 온라인에서 일어난 성적 수치감을 일으키는 언어나 성적 장면 촬영들 모두 실제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이다. 일선 경찰관들은 온라인 성폭력에 적용할 수 있는 법조항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4조(음란영상 배포·임대·판매/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한 점) 등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여 온라인 성폭력을 사건으로 접수하지 않는 것이다. 일선 경찰의 무관심은 성별과도 관계가 있는데 경찰이 남성인 경우 여성일 경우보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이 훨씬 낮다고 한다. 이는 담당 검사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어떤 경찰, 혹은 검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건이 처리가 되는 양상에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음란한 욕설을 했을 경우 성폭력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수 있음에도 모욕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심층면접 여성8).

사이버수사대에서부터 시작한 사이버 안전업무는 그 시도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선례가 없는

선진적 온라인 범죄 담당 조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인력이나 예산에 있어 의도한 일을 해내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온라인 사용이 어떤 곳보다 활발한 우리사회에서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를 담당하려면 가히 천문학적 인력과 예산이 필요할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사이버수사대부터 실제 신고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무용론이 돌고 있었다. 더구나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는 더욱 온라인 성폭력 규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처럼 온라인 성폭력을 다루는 조직의 부재 및 일선 수사관들의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인식부족은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무관심을 가져왔다고 여겨진다. 또 이러한 무관심을 경험한 시민들은 신고가 무용함을 다시 깨닫게 되고 결국 신고하지도, 처벌하지도 않는 악순환을 만든다고 하겠다.

3. 온라인 인권침해 관련 법령

우리사회에서 온라인 인권침해, 특히 온라인 성폭력 같은 여성이 취약한 범죄가 잘 규제되지 않는 것을 고려한다면 막상 온라인 인권침해에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은 어느 나라 보다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실제 우리나라에는 아래와 같이 온라인 인권침해 관련 법령이 존재한다.

〈표 2〉 온라인 인권보호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법률

관련법률	내 용
국가정보화 기본법	<p>제40조(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정보통신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국민정서를 함양하며, 불건전한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2. 정보통신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3. 정보통신윤리 관련 연구 및 개발 4. 정보통신윤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5. 건전한 정보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 등 <p>제41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교육 및 연구 2.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 활동의 지원 및 육성 3. 이용자의 명예·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4.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5.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p>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업을 할 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관련법률	내 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44조의4(자율규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표 3〉 온라인 인권침해 처벌에 관한 법률

유 형	구성요건	관련법률	처벌
온라인 성폭력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 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백만원의 벌금
온라인 스토킹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 44조의 7 제3호(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등), 제74조 제3호(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온라인 명예훼손	(정통방법)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 혹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형법)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정통방법) 사실 적시의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사실 적시의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온라인 모욕(비방/욕설)	온라인 모욕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없으며 형법에 있는 모욕에 대한 모욕의 정의를 가져와 사용(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형법 제311조(모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백만원 이하의 벌금

유 형	구성요건	관련법률	처벌
온라인 누드 /성행위 영상/사진 유포	(정통망법)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 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성폭력특별법)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호(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74조 제2호 (벌칙)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 2의 1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추구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정통망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특별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온라인 성매매	(아청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성폭력특별법) 폭력과 위력으로 성매매를 하게 한 자, 성매매 소개 및 알선 혹은 성매매를 광고 한 자, 성매매를 한 자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모두 처벌에 관한 조항)	(아청법)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 폭력과 위력으로 성매매를 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의 벌금 성매매 소개 및 알선 혹은 성매매를 광고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표 2〉는 온라인 정책의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법령들로 불건전한 정보 차단과 정보 이용시 국민의 인권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권리보호의 내용은 사생활침해과 명예훼손으로 한정되어 있어 성폭력은 제외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은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불법정보와 폭력의 처벌에 적용할 수 있는 법령들이다. 이 법령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통신매체이용음란)(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명예훼손)에서 온라인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 법령들과 이 외에 온라인에 관한 것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인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명예훼손)(모욕), 헌법(사생활권)등 이다.

이들 법령의 특징은 그 적용의 범위가 상당히 관용적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법들은 온라인 성폭력을 비롯해 문제가 되는 다양한 인권침해의 유형들의 처벌에 적용할 여지가 크다. 예를 들어 온라인 스토킹에 적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44조 7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의 온라인 스토킹보다 더 넓은 범위의 행위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연방법인 주 간 통신법(Interstate Communications Act, 18 U.S.C. §875c)에는 온라인 스토킹을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기 위한 위협을 포함한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명시적인 위협이 없는 한 타인을 괴롭히는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전화를 통한 괴롭힘 금지법(Federal Harassment Statute, 47 U.S.C. §223)은 ‘여성에 대한 폭력금지법’의 조항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사람을 짜증나게 하거나 학대하거나 위협하거나 괴롭히기 위해서 **익명**으로 전화”를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아는 사람의 스토킹은 적용이 안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스토킹처벌및방지법(Federal Interstate Stalking Punishment and Prevention Act, 18 U.S.C. § 2261)의 2006년 개정에서 “실질적인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바뀌고 익명 조항도 없어서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령은 의도나 익명성 등과 관련 없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반복’적인 정보이기만 하면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넓은 해석의 여지는 적용에 있어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 일선 수사기관에서 이것이 여성에 대한 온라인 스토킹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여성에 대한 온라인 인권침해 판례를 보면 이를 여성 인권침해 사건에 적용한 경우를 지난 10년 동안 2건 볼 수 있다(부록 1 참조). 따라서 여기에 ‘공포심’이나 ‘불안감’ 외에 ‘성적 수치심’처럼 성폭력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조항을 구체화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성폭력 관련법이 특별법으로 가중처벌되고 있다는 데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즉, 사람들이 체감하는 범죄의 중함 정도와 적용되는 처벌의 중함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성폭력은 언어적, 시각적 폭력으로서 오프라인 성폭력과 같은 정도의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반해 이 법령에 따르면 2년 정도의 처벌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부담을 느끼고 아예 적용을 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다. 현재 온라인 성폭력에서의 문제점은 범죄라는 인식이 없는 점이고 이 경우 중한 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처벌을 하는 자체가 더 중요하고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법에서 형량을 낮추는 것도 적용빈도를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법의 적용이 낮은 또 다른 원인은 현장에서 이러한 법을 잘 모르고 있을 수 있고 이는 성폭력법과 정보통신망과 같은 상이한 법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또 성폭력법에 속해있음으로써 온라인의 속성이 강조가 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 성폭력법 등에 있는 조항은 오프라인 성폭력을 주로 하고 있고 온라인에서의 행위는 부수적인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 조항에 해당되는 인권침해가 일어날 경우에도 단독으로 일어나면 사건으로 구성되기 어렵다. 즉, 온라인에서 성매매 제안을 했더라도 이것이 실제 성매매와 연결되지 않으면 제안만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조항은 온라인이 실제 소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현재의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온라인 성폭력 관련법을 하나로 모으는 것도 방법인데 이 때 법명을 ‘온라인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으로 해서 현재 존재하는 관련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모으고 여기에 온라인 성폭력 방지를 위한 학교 교육, 경찰 교육, 시민교육 등의 국가 의무, 그리고 시민활동 지원의 의무 등을 명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온라인 인권침해 관련 정책

온라인 인권침해의 규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경찰조직과 업무분장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이러한 현실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의 부족에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규제의 문제에서처럼 온라인에서 성적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부재가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온라인 인권침해는 온라인을 소통의 통로로서 활발하게 사용하는 젊은 세대에게서 가장 많이 부딪치는 문제일텐데 이 세대들의 특성상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보다는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경향이 큰 것도 이를 방임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온라인 성폭력이나 성희롱은 신체에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어서 진정한 의미의 폭력이 아니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사이버안전 정책에서도, 성폭력 정책에서도 온라인 성폭력은 제외되는 결과를 낳았다. 온라인 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미래과학통신부에서도 온라인 성폭력은 여전히 정책의 관심 밖이다. 온라인 인권침해는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인터넷윤리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직원 3명의 작은 조직이다. 그나마 여기서도 온라인 성폭력만을 전담하는 것은 아니고 주된 관심사도 아니다.

온라인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볼 때 이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와 온라인의 인권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조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온라인에서의 인권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유엔, EU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반복해서 제기하고 있는 만큼 우리와 같이 온라인 선진국에서는 앞장서서 나가야 할 것이다.

5. 개선 방안

앞에서 온라인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 및 해소노력이 부족한 원인에 대해 수사체계, 정책, 법령체계를 중심으로 논의해보았다. 여기서는 이러한 측면 외에도 인터넷 사업자, 교육 등에 있어서의 개선방안을 제안해본다.

가. 정부 차원

앞에서 서술한대로 수사체계, 정책, 법령체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온라인 성폭력을 경찰청의 업무로 명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특히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공연성이 없는 일대일 폭력을 관장할 수 있는 기구가 경찰청이므로 이것이 경찰청의 업무임을 인식하고 또한 일선 경찰서에,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홍보해야 할 것이다. 조직에 있어서도 현재는 사이버보안국에서도, 성폭력 담당인 여성청소년과에서도 정확히 자신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어떤 조직에서 이를 담당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 성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범죄 유형에 ‘사이버 성폭력’을 명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여성 성폭력 업무를 맡고 있는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폭력 업무에 온라인 성폭력의 범주를 포함시키고 성폭력방지종합대책에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대책도 같이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 성폭력을 당할 경우 현재로서는 온라인 전용 신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이 별도로 없어 기존의 성폭력상담소의 업무를 온라인 성폭력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폭력상담소에서 온라인 성폭력의 특수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매뉴얼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폭력상담소에 들어온 온라인 성폭력 신고의 통계를 만들어서 온라인 성폭력의 추이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필요하면 온라인 성폭력 전용 신고센터/상담소를 만드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관련 법령의 개선이나 새로운 법령의 제정을 위해서는 좀 더 정치한 법령 연구가 필요하다. 우선 경찰청에서 적극적으로 온라인 성폭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근거법령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경찰청의 온라인 범죄 처벌은 통신망법에 근거하고 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온라인 성폭력 관련 항목을 명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전술한 것처럼 가칭 ‘온라인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을 제정하여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처벌에 대해 명시할 수도 있다. 또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2호)과 국가인권위법(제2조 3호)에서는 현재 지위, 업무, 요구와 관련된 굴욕적 행위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만을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온라인 상에서의 성희롱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즉, 지위나 업무와 관련 없이 특정 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적 태도로 인해 이 성에 속한 개인을 비하하거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드러난 신체적, 재산상의 피해 여부에 관계없이 정신적, 인

격적 피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주도의 교육의 필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사용 시기가 점점 빨라지면서 초등 교육 과정으로부터 온라인에서 성폭력이 단순히 성별화된 장난이나 실제의 위험이 배제된 성적 관심 정도가 아닌 실제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동반하는 범죄이고 피해자 차원에서 그냥 무시하거나 피해가야 할 것이 아닌 온라인 사용의 기본적인 원칙에서 절대 행해서는 안 될 것임을 인식시켜야 하는 것이다. 또한 지금 여성가족부의 정책으로 되어 있는 성폭력 교육의 일환으로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인터넷 사업자 차원

인터넷 사업자들의 차원에서도 온라인 인권침해의 해결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 현재 대형 포털사이트와 게임 사업자들은 인권침해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포털사이트에서는 신고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발견한 불법, 유해정보를 차단하고 있고 게임회사에서는 ‘금칙어’ 시스템을 통해 자체에서 수집한 일련의 금칙어를 사전 차단하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전반에 퍼져있는 인권침해적 정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력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먼저 전술한 것처럼 대형 포털사이트의 신고시스템은 그다지 이용자 친화적이지 않다. 첫째, 대응속도가 빠르지 않다. 특히 신고의 처리과정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언제까지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알 수 없고 신고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어떤 이유로 하지 않았는지 설명이 없다. 둘째, 신고와 처리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얼마나 많은 신고가 들어오고 그 중 얼마가 처리가 되는지 알 수 없다. 이러한 신고시스템의 문제는 신고시스템을 정교화 함으로써 많은 부분이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페이스북은 최근에 신고시스템을 개선하였는데 불만에 대한 선택을 다양화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페이지운영자에게 직접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등 이용자의 입장을 반영해주며 특히 신고에 대해 어떤 처리를 했는지 (혹은 왜 하지 않았는지) 알려주어 이용자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부록 2 참조).

또한 페이스북은 2013년 5월 ‘여성, 행동과 미디어(Women, Action & Media: 미디어에서 젠더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미국에 근거한 비영리 단체),’ ‘일상에서의 성차별주의에 대한 과제(Everyday Sexism Project),’ 그리고 운동가 Soraya Chemaly가 동맹하여 펼친 페이스북에서의 여성에 대한 혐오발언에 대해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시행하라는 운동에 대해 혐오발언을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페이스북의 공동체 기준(Facebook Community Standards)’에 포함된 금지된 표현-폭력과 위협, 자해, 불링(bullying)과 괴롭힘, 시각내용, 알몸과 포르노그래피-중의 하나로써 취급되며 이의 정의는 “인종, 민족, 조국, 종교, 섹스, 젠더, 성적 경향, 장애나 질병에 근거하여 어떤 보호받아야 할 범주의 사람들에게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공격(direct and serious attacks on any protected category of people based on their race, ethnicity, national origin, religion,

sex, gender, sexual orientation, disability or disease)”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떤 종류의 도전도 용인하지 않으려는 최근의 언론 관련 세계적 기류를 고려할 때 상당히 용기 있는 태도로 보인다. 페이스북에서는 이러한 금지된 표현이 페이스북 공간에 올라왔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제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페이스북, 2013. 5).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포털사이트 중 일부는 온라인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 있고 온라인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시민단체나 공공영역에서의 노력에 발을 맞추고 있으나 일부는 자신의 사이트에서는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어떤 대화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곳도 있다. 따라서 우리의 인터넷 사업자들도 이용자와 시민사회의 소리에 항상 귀를 열고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온라인 전체에서의 인권침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KISO(한국 인터넷 자율기구)의 범위 확장이 필요하다. 현재 키소는 10개의 인터넷 사업자가 회원인데 다음, 네이버, 케이티하이텔,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 등 한국 대형 포털사이트 중심이다. 그러나 많은 SNS 운영자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최근 SNS에서 일어나는 온라인 인권침해는 자율 규제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구글, 야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외국회사의 한국 자회사도 들어와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가 이러한 사이트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국가 중의 하나인 것을 고려하면 이들도 키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 인권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다른 공간인 게임을 운영하는 회사들도 자율규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들 게임회사들을 연합한 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다. 시민사회

온라인의 이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금 국가주도의 규제만으로 온라인 인권침해를 막기는 어렵다. 온라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의 참여는 언제보다도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온라인은 어떤 매체보다도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간주되고 있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는 때로 극단적 의견으로 인한 과열된 의견대립을 가져오고 있다. 온라인 성폭력도 많은 경우 이러한 극단적인 이용자들에 의해 생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극단적인 의견 표명이나 폭력적 언사를 쓰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네티즌 차원의 자발적인 운동이 필요할 것이다. 페이스북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시민 차원의 운동이 중요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네이버, “여성 이용자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자 자율규제 노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문화콜로키엄, 2014. 7.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3 통신심의사례집, 2014. 3.

페이스북, “Controversial, Harmful and Hateful Speech on Facebook,”

<https://www.facebook.com/notes/facebook-safety/controversial-harmful-and-hateful-speech-on-facebook/574430655911054>, 2014. 9.29. 검색.

부록 1: 법령별 여성 대상 온라인 인권침해 사례 (2005-2014)¹⁾

법령	사례	비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인터넷카페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교육을 해준다고 대화하면서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신체사진 얻음. 이를 협박하여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6건
	- 카메라로 촬영한 음란물을 휴대전화로 배포	
	-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보냄	
	- 나체사진 자위 동영상 촬영 요구(미성년자대상)	
	- 휴대전화를 통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음향전송	
	-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전송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	6건
	- 나체사진 자위 동영상 촬영 요구(미성년자대상)	
	- 피고와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촬영. 유튜브 및 페이스북 업로드	
	- 영상통화중 피해자가 가슴을 만지는 모습을 몰래촬영	
	- 모텔에서 성관계 도중 성관계장면을 휴대전화로촬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명예훼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드러냄)	- 피해자가 학력을 속여 입사하였다는 의혹의 글에 피해자가 답변을 하지 않는 것에 인터넷사이트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	6건
	- 피해자가 피고인을 납치 및 살해하려 시도한 것처럼 허위사실을인터넷 게시판에 적시,	
	- 일일 토론자유게시판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공공연하게 명예를 훼손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장면의 동영상 업로드로 인한 명예훼손	
	- 피해자의 나체 사진,성기등이 촬영된 사진 업로드로 인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4조 (음란영상 배포·임대·판매/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함)	- 영리목적 성행위 동영상 유포/방조	14건
	-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 성기 등이 촬영된 사진을 업로드시켜 유포함	
	-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 cd제작하여 유포	
	- 페이스북에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 동영상 업로드 및 유포	
	-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	
	- 나체사진 자위 동영상 촬영 요구(미성년자대상)	

1) 온라인 인권피해에 해당되는 범정사건을 찾기 위해서 검색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키워드 검색을 하거나 온라인 인권피해 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들을 모두 넣어서 검색하였다. 검색어는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어플(어플리케이션), 채팅(랜덤 채팅), 조건만남, 미성년, 비방, 욕설, 협박 등이었고 '로앤비' 법률정보 전문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였다. 이 결과로 찾은 온라인 인권피해 관련 사건은 2005년 12월 23일부터 2014년 6월 3일 기간 동안에 모두 58건이었다.

법령	사례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폰을 통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 불안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반복 전송 - 성관계 녹음내용 유포 협박 및 관련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반복 전달 - 스타킹을 신고 있거나 음부가 보이는 모습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제작 및 판매 - 교제 이후, 피해자가 다른 지인과 얼굴을 맞대고 찍은 사진을 보고 격분하여 그 이후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내고 협박함. 협박하여 모텔로 데려간 뒤에 간음·간음도중 은밀한 부위와 성관계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 -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하는 등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협을 가하는 음성메시지를 전송 -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영상통화를 하는 도중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만지는 모습을 몰래 녹화 후, 아래 성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유튜브에 올리겠다 협박, 성기 부분을 손으로 문지르는 등 자위행위를 하도록 함. -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와 술을 먹고 강제간음 및 강간. 그 후에 피해자가 강간으로 고소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캡처사실을 협박 불안감 조성 - 채팅 어플 차단하자 휴대전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 불안감 조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채팅사이트에서 만나 피고인의 집에서 3회에 걸쳐 성을 사는 행위를 함 - 온라인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아동청소년과 조건만남을 시도함 -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자신이 연예기획사 소속 가수 연습생이라고 하며 성을 팔도록 권유 - 온라인 채팅 사이트에서 즉석만남을 통한 성매매 - 온라인 채팅 사이트로 만난 피해자와 성매매, 그 후 대가로 준돈을 다시 갈취. - 온라인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돈 6만원을 주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함 	6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킹을 신고 있거나 음부가 보이는 모습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제작 및 판매 - 나체사진 자위 동영상 촬영 요구 및 제작 (미성년자대상) - 스타킹을 신고 있거나 음부가 보이는 모습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판매 -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해준다고 대화하면서 피해자의 신상정보, 신체사진 얻어 소지함 - 스마트폰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피해자의 얼굴, 사진, 상반신, 가슴노출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함. 채팅에 계속 응하지 않자 위 사진들을 인터넷등 에 유포할 것처럼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 (청소년 대상) 	5건

법령	사례	비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벌칙 제21조) -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 피해자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진과 조건만남이라는 문구의 광고를 올리고 성매매 행위 하려함	7건
	- 인터넷카페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성매수	
	- 온라인 채팅 사이트에서 즉석만남을 통한 성매매	
	- 온라인 채팅 사이트에 접속하여 13만원을 주고 성교행위. 피해자가 청소년인 자신과 성매매를 하였던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협박 금품 갈취	
	- 피해자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진과 조건만남이라는 문구의 광고를 올리고 성매매 행위 하려함	
	-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수 후에 감금	
통신 비밀보호법 제16조 (타인간의 대화 녹음·청취)	- 피고자와 피해자의 성관계 녹음	1건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자유게시판에서 명예훼손	4건
	- 피해자가 학력위조를 하였다는 거짓사실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	
	- 피해자가 피고인을 납치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적시	
	- 피해자를 꽃뱅이라고 하는 등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	
형법 제311조 (모욕)	- 일일 토론자유게시판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욕설 등으로 모욕	2건
	- 피해자의 처녀성을 언급하는 등 저질적인 글로 모욕	

부록 2: 페이스북 신고 방법 및 결과

- 페이지 커버사진의 (...) 버튼을 누르면 여러 옵션 중 ‘페이지 신고’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신고이유에 따라 신고할 수 있음



[그림 1] ‘페이지 신고’ 메뉴



[그림 2] 신고 버튼을 누르면 처음 나오는 창



[그림 3] ‘그냥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를 선택하면 나오는 다음 창



[그림 4] ‘나 또는 아는 사람을 괴롭힙니다’를 선택하면 나오는 다음 창



[그림 5] ‘Facebook에 게시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를 선택하면 나오는 다음 창



[그림 6] ‘나의 지적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를 선택하면 나오는 다음 창

- 음란물로 페이지 신고를 한 경우, 페이스북이 이후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줌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과장)
- 유정석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운영실 팀장)
- 강형철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 소장)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



Ⅰ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과장)

『여성의 온라인 인권 피해현황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한 번이라도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응답자의 67.4%이며, 스토킹, 명예훼손·모욕, 영상유포까지 합하면 그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85.0%에 달했다. 한편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13년도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사건 발생건수는 1,411건으로 전체 성폭력 발생건수(28,786)의 약5%를 차지하는데, 미처 인지되지 않은 온라인 성폭력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온라인 성폭력이 일상 속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 중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44.2%에 달할 정도로 피해자의 대응은 미약하다. 이는 보고서가 지적한 대로 온라인 성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적절한 대응수단을 찾기 어려워서일 것이다. 그러나 국민 다수가 온라인 인권침해의 일종인 '개인정보 유출'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¹⁾을 상기한다면,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국민의 문제의식 또한 낮은 수준은 아닐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주요 원인은 피해자가 선택 가능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없다는 것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사실 온라인성폭력이 완전히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여성의 온라인 인권 피해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가 지적했듯 성폭력을 비롯한 온라인 인권침해 예방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 또 최근에는 온라인 성매매 방지를 위해 성매매방지법도 개정²⁾된 바 있다.

문제는 실제 법령에 따른 처벌 및 피해자 지원 대책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미비점을 스스로 고찰해보는다면, 우선 피해자를 가장 직접적으로 대면하

1) 2011년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의식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 전문가 모두 가장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인권 분야로 '개인정보 유출'을 꼽았으며, 일반국민 중 악성댓글, 신상 털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는 것에 찬성하는 비율이 67.4%였음

2) 성매매방지법을 개정('14.3.27 공포, 9.28 시행)하여 2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및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규정

는 성폭력 상담원에 대한 교육에서부터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것을 문제로 꼽을 수 있다. 교육훈련시설의 훈련과정이나 보수교육과정에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상담원이 참고할 만한 별도의 온라인 성폭력 대응 매뉴얼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원이 간혹 온라인 성폭력 피해 상담을 하게 되더라도 온라인 성폭력의 특성을 감안한 대응책을 피해자에게 안내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향후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상담원 교육을 위한 연구 및 이에 따른 교육계획 수립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16년 실시될 성폭력 실태조사에 온라인 성폭력에 관한 조사항목을 포함함으로써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한편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관계부처의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성폭력방지종합대책에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고 대책 이행 점검 회의를 통해 추진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방지종합대책 수립에 참여하는 총 11개 부처 중에는 온라인 성폭력과 관련된 경찰청, 방통위 등의 부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 점검 회의를 통해 해당 부처에 온라인 성폭력 대책을 마련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오프라인보다 오히려 온라인을 통한 사람 간의 교류와 소통이 더 활성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온라인상에서의 성폭력 등 여성 인권 침해는 향후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추진에 있어 무엇보다 큰 동력이 되는 것은 사회적 관심과 문제제기이므로, 이번 여성정책포럼과 같이 연구기관과 시민사회 차원의 문제제기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여성 권리침해 관련 KISO 자율규제 사례



■ 유정석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운영실 팀장)

□ KISO의 자율규제

- KISO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자율규제 기구이며, 네이버, 다음카카오, SK컴즈, 오늘의유머, 클리앙, 뽀뿌, 파코즈하드웨어, SLR클럽, 줌닷컴 등 국내 주요 사업자 및 커뮤니티 사업자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 KISO 회원사는 신고센터를 통해 권리침해, 유해정보, 개인정보 침해, 초상권 침해,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해 신고접수를 받고 있음
- 일부 회원사는 365일 24시간 유해정보/권리침해 신고접수를 받고 있음. 일명 셀카 유출 등 초상권 침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의 이슈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임
- 처리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1일가량 소요되며, 신고당시 기입한 연락처로 결과 회신이 이루어짐. 처리 절차는 신고센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사이버 성폭력, 스토킹 등이 메신저나 이메일 영역에서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살펴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음. 메일을 이용한 성폭력, 스토킹의 경우 이용자 차원의 수신거부 기능을 활용하거나, 메신저의 신고 버튼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다만,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이트라 하더라도, 운영 규모가 매우 작은 사업자들의 경우, 신고센터가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새벽시간대 등 취약시간대에는 원활히 운영되지 않을 수 있음. 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즉 공동의 모니터링 센터 운영지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서울시-KISO MOU

- KISO는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과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 폭력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2년 9월 14일 업무 협약(MOU)을 체결
- KISO는 성매매 유인, 알선 게시물 등의 신고 게시물에 대해 회원사와 협력 처리하며, 여성폭력 방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MOU 체결과 함께 ‘여성폭력 방지 공동 캠페인’도

경찰과 함께 추진한 바 있음

- MOU 운영방식은 서울시에서 모집한 약 1천명 가량의 자원봉사자가 모니터링 결과값(증거자료, 법적 근거, URL 등)을 KISO에 전달하고, KISO는 검토 후 회원사에서 자율규제 하도록 안내하는 방식
- 2013년부터 2014년 10월 2주까지, 81,425건 처리
- 자원 봉사자를 통한 처리라는 점에서 사회적 효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온라인 청소년 보호 DB

- KISO는 네이버, 다음카카오, SK컴즈 등 회원사와 함께 약 1년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음란물, 성인 이미지, 스팸/홍보 이미지 등의 필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청소년 보호를 위한 DB 시스템을 구축
- 본 DB는 청소년 유해 이미지 검수의 참조 DB로서, 이미지의 특정 패턴을 추출한 후 이를 기존에 검수된 데이터와 비교하여 이미지의 유해성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임
- 향후 본 DB는 동영상까지 DB구축 영역을 확대하고 공익목적으로 외부 사업자들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중

□ 자율규제 참여자 확대 관련

- Facebook, Google, Twitter 등 외국에 서버를 둔 사업자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KISO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

□ 제언

- 온라인 공간의 권리침해 현상을 남녀 구분 등의 유형으로 세부화 하는 것은 바람직한 시도인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유형화되어야 그에 맞는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향후 아래의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좋을 것 같음
- 사이버 성폭력 증거자료의 증거능력 확보 방안 연구
 - 오프라인의 물리적 성폭력의 경우, 성폭력 성립조건들이 있을 것이고, 그 성립조건들은 법적 처벌의 증거능력이 이미 보장된 것임. 오프라인 성폭력 성립조건과의 비교를 통해 사이버성폭력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성립 조건들을 유형화해보고 증거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은 시도일 것 같음

○ 사이버성폭력의 개념 정립

- 더불어, 사이버 성폭력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성폭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이미지는 오프라인 현실세계의 성폭력 이미지가 강한 것 같음
-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은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사이버 성폭력은 ‘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물리적 폭력에 기반하여 이해되기 쉬울 것 같음
- 즉 사이버 성폭력은 오프라인 성폭력의 구성요건 가운데 물리적 접촉/폭력 부분이 성립하기 어려운데, 성폭력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 때문에 사이버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우선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고, 표현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고민하게 됨
- 따라서, 사이버 성폭력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와 사회적으로 통용되었을 때 이용자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쉽도록 단어의 표현을 재정립해보는 것도 고려대상이 되면 좋을 것 같음



온라인 인권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그리고 법제 연구라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엄밀한 조사를 실시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진의 전문성과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사회현상은 다층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 등의 하나의 연구방법으로는 본질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의 현상을 분석할 때 세 가지 이상의 연구방법, 즉 ‘삼각 기법’(triangulation)을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방법론 교과서가 권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개인적 차원의 연구는 단일 방법론만 사용하기에도 급급하기 때문에 현황에 대한 분석은 겉핥기에만 그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문 국가연구기관이 나서서 여러 방식으로, 그리고 원근법적으로 현상을 조망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한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을 보면 피해 경험 자체는 남녀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심리적 피해는 여성이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아마도 온라인 상황은 성별이 잘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라 남녀 구별 없이 인권침해가 일어났기 때문일 것이고 이에 따라 실제적인 심리적 피해는 원래의 목표(?)였던 여성이 크게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설문조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여성 피해의 심각성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심층인터뷰에서 참가한 여성들이 진술한 온라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여성 대상 성폭력의 모습에서 잘 드러납니다. 심층조사에서는 설문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여성 대상 인권침해의 유형과 심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가장 우려스러운 결과는 여성들이 인권 피해를 당했을 때 이를 신고하거나 하는 적극적인 행동보다는 해당 활동을 중지하거나하는 ‘회피’의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프라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성들은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 상황에서 2차 피해의 우려 등을 이유로 문제를 회피하거나 심지어는 피해를 감수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도 이것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거꾸로 가해자가 처벌을 받고, 본인의 2차 피해가 없으며, 가해자를 다시 볼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경우에만 겨우 문제제기를 할 요기는 냅니다.

두 번째 발표인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개선방안’에 온라인 상황에서의 이러한 문제가 고스라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온라인에서 인권침해의 원인과 관련해서 형사체계 등 규제의 측

면, 정책적 측면, 법령의 측면, 문화적 측면, 그리고 교육의 측면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데 여성의 인권침해의 문제가 오프라인 공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해결될 수 없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아니, 오프라인 공간에서 그간 이루어진 성과보다 훨씬 못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에는 제도적인 미비는 물론이고, 공권력 집행자들의 인식 부족 문제가 잘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여성들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가능성은 훨씬 높은 것입니다. 문제를 제기해도 가해자가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자신이 2차 피해를 받게 된다면 이들에게 회피는 불가피한 선택일 것입니다.

국가 기구가 이 문제에 소홀하거나 미흡하다면 이는 다시 시민사회의 역할을 요구하게 됩니다. 시민단체들이 사이버 인권 피해자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프라인에서 나타나는 회피의 문제로 지난한 길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지난 10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전담팀을 설치하고 검사 5명과 수사관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권의 보호 목적보다는 공권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상에서도 국가의 의무는 면제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실적’ 공론장이 되어버린 사이버 공론장에서의 여성의 위축과 참여배제는 사회발전을 위해 매우 우려스런 현상입니다.

지정토론



■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 소장)

한때 컴퓨터가 매개커뮤니케이션적인 성격이 강해지면 온라인에서의 성차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적도 있었다. 과거 온라인 상에서 주목하였던 성차(性差)^{성차}는 여성의 정보(기술)능력에서의 격차와 온라인 음란물을 둘러싼 쟁점에서 보듯 온라인 콘텐츠에서의 성차였다. 그리고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온라인 공간이 가진 남성적인 성격, 즉 주로 전쟁, 범죄, 또는 스포츠 등 남성적인 소재를 다루는 소프트웨어라든가, 컴퓨터에 대한 ‘사물지향성’ (컴퓨터를 공학적 도구, 게임기 워드프로세서 등 기계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때문이며 컴퓨터가 점점 멀티미디어기로 전환되고 통신과 결합되어 매개커뮤니케이션으로 발달된다면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인간관계지향적이며 현실지향성을 지닌 여성의 활용능력이 향상되어 온라인에서의 차이는 많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영민, 2000)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온라인은 매개 커뮤니케이션적 성격이 분명 강해졌음에도 성차는 여전하다. 그리고 그 중요한 내용이 온라인에서의 여성인권피해현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서 오늘 토론회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온라인 인권피해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이고 분석적으로 알기 어려웠기에 이번 조사는 훌륭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더 진전된 후속조사가 있기를 희망하며

후속조사에서는 맥락을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조사에 보면 남성의 피해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장 많은 피해유형으로 꼽은 스토킹 피해경험에서,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이 사적인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거나 만나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40대 남성(152명, 43.9%)이 가장 큰 피해자였다. ‘모르는 사람이 온라인에서 내 주변 사람에게 접근하여 나에게 대한 정보를 알아내려고 한’ 경우도 30대 남성(112명, 36.2%)이 큰 피해집단이었다. 이러한 통계는 온라인의 인권피해 현상이 남녀를 떠나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대책마련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이들 통계를 좀더 세밀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자칫 온라인 상에서는 “남성이 오히려 피해받고 있다”는 주장으로 온라인 여성인권피해에서 ‘여성’이 삭제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남성도 온라인 폭력을 당하는 엄연한 현실이지만 여성의 스토킹과 남성의 스토킹은 그 메시지

의 내용이나 강도, 그리고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의 정도에서 질적으로 다른 맥락을 보일 수 있다.

온라인 대응이 어려운 점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인간행동을 어떻게 보아야하는가’의 관점이 아직 불분명하다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나 ‘사이버윤리’의 조건이라는 쟁점과 맞닿아 있다.

2013년 대한변협의 <인권보고서>는 일베 사이트를 예로 들며 표현의 자유와 평등보호(차별금지)간의 대립을 해소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혐오적 표현”에 대한 무조건적인 관용이나 불개입은 적절치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다수의 혐오적 표현에 의해 인격권이 침해되고 공론의 장에서 배제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근본정신에 반하므로 형벌로 처벌하기 보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혐오적 표현이 차별에 해당함을 명시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인권피해가 성별화되어 특정 집단이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느끼면 공정하고 평등한 여론의 장으로서 인터넷의 역할이 훼손된다”는 발제의 맥락과도 같은 것으로 토론자도 취지에 동감한다..

다만 이번 온라인 여성인권침해 조사를 통해 현실세계의 각종 차별, 잘못된 성문화와 인권의식이 그대로 사이버세계로 연장되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가해자나 법을 집행하는 범죄예방체계를 보면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성적 위협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화가 엄존한다. 때문에 여성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온라인 상의 여성폭력 역시 명확히 성폭력임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 사례에서도 성폭력적인 내용과 맞닿아 있는 것을 성폭력 범주에 포함시키면 좀 더 온라인 상에서의 성적 위협에 집중하게 되지 않을까한다. 물론 침해 대응에서는 ‘명예훼손’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겠지만.

한국여성민우회의 “몰래카메라 촬영 및 영상 유포 협박 피해 상담 분석”자료에 <피해에 ‘공감’하면 피해는 ‘중단’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친밀한 관계를 정리하려는 상대방에의 협박 수단으로 ‘성행위 촬영물’이 생산되고, 그렇게 생산, 유포된 파일은 호기심에 ‘음란물’로 소비 확산된다. 이같은 경로를 차단하려면 이런 영상물 유포는 잘못된 것이므로 ‘보지 말자’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도 작년부터 ‘(온라인) 여성혐오’ 관련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여성운동그룹의 할 일이 더 많아진 것 같다.

〈참고〉

대한변협 2013 인권보고서, 2013

윤영민 사이버공학의 정치, 2000

전석호 포르노 섹스 그리고 미디어, 1999

한국여성민우회 <성행위 촬영물 유포·협박 피해> 상담분석 및 파일공유사이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2013